

NPO 정보지식 포럼 | 1-3차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신뢰하는가

| 포럼 기획 의도

사회를 둘러싼 갈등과 불안, 분노는 왜 해소되지 않을까요?

2018년, 우리나라 개인 소득 최상위 0.1%는 중간 소득자의 61 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노동 시간, 노동의 질, 임금의 양극화 문제로 인한 갈등과 대립은 매일 크고 작은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빈집과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높게 치솟는 집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기후위기가 가져온 불평등은 이미 일상을 침범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위기에 대한 실감은 낮을까요? 모두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좋은 동네에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불평등으로 가득한 구조 속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NPO 정보지식포럼은 우리 사회의 충돌과 적대감의 현상을 살펴보면서,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총 5 차로 기획했습니다.

‘양극화’, ‘기후위기’, ‘불평등’, ‘차별 및 혐오’, 총 4 가지 요인을 충돌과 적대감의 원인으로 보고, 한국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구조가 이를 어떻게 조장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4 가지 요인을 각 포럼(1~4 차)의 주제로 선정하여 NPO 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지막 5 차에서 전환을 위한 사회 재구성에 필요한 NPO 의 역할과 방향을 제안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¹ 미진행된 4~5차는 2022년 상반기에 진행 예정.

Contents

| 1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양극화'

발제 1. 한국사회 다중격차, 어떻게 풀 것인가 신진욱.....	1
발제 2. 불평등의 시대를 건너가는 다리 황세원.....	8
발제 3. 문제는 위가 아니라 아래, 최저선이 없다 이원재.....	17
발제 4. 일극 중심 사회에서 지역 공생 사회로 하승수.....	26
[패널 Talk] 사회 양극화를 좁히기 위한 핵심 쟁점을 논하다.....	33

| 2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발제 1.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한재각.....	40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주거권의 긴급한 요구 김윤영.....	52
발제 3. 폭풍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김정열.....	63
발제 4.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시민사회의 자세 정규석.....	72

| 3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불평등'

발제 1.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을 말해야 하는 이유 박권일.....	81
발제 2. 학력·학벌 차별 반대운동과 시민사회 연대하기 윤서.....	92
발제 3. 교육은 학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정용주.....	101
발제 4. 자본과 국가는 노동의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윤지영.....	112

| 일러두기

*이 문서는 3차까지 진행된 ‘NPO 정보지식포럼(총 5회차)’ 현장을 기록 및 재구성하여 각 포럼 주제를 밀도 깊은 텍스트로 아카이빙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1차 포럼에서 ‘[패널 Talk] 사회 양극화를 좁히기 위한 핵심 쟁점을 논하다’는 노동, 경제, 지역 분야의 연사(3명)와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 패널(5명)의 현장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3차 포럼은 활동가 패널과의 대담 대신에 온라인 참가자의 사전·현장 질문을 토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각 포럼 발제의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은 온라인 참가자의 사전·현장 질문을 토대로 진행된 사후 인터뷰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1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양극화'

|발제 1. 한국 사회 다중격차, 어떻게 풀 것인가?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포럼 일자 : 2021 년 10 월 12 일 화요일)

지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중격차를 어떻게 풀 것인가?”입니다. 1차 포럼에서 다룰 노동, 경제, 지역 격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사회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중격차와 집단적 균열의 구조

한국 사회의 다중격차는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불평등의 다원성²에서 생겨난 적대는 감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이해관계부터 서로 다른 삶의 처지, 살아온 경험의 차이 등 다양한 차원을 포괄합니다. 경제, 지역, 젠더 등 여러 차원의 사회적 적대를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근저에 놓인 원인과 기제를 풀어나가야 진정한 의미의 갈등 극복과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기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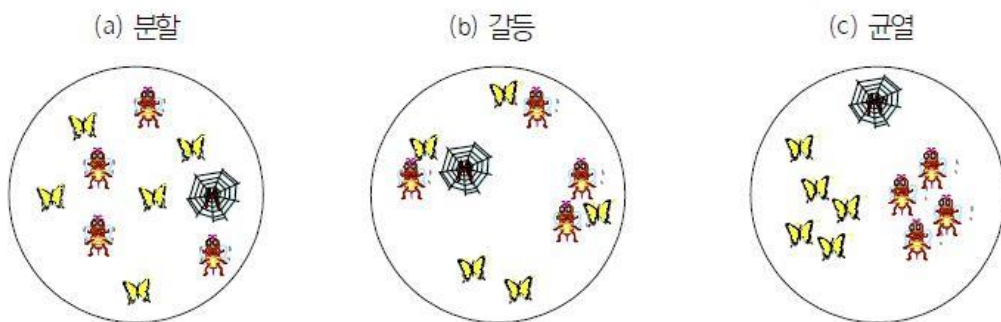
한편 다양한 불평등 차원 중에서 어떤 것은 집단적 균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고용 형태, 자산의 규모, 계급 등 여러 측면에서 덩어리진 균열이 생겨나면서 명시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구조적 격차와 집단적 균열과 갈등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굴러가는 사회적 적대의 구조와 역학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때 균열 개념에서 분할, 갈등, 균열 이 3가지를 따

² 사회 불평등이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존재하고, 사회마다 시대마다 다양한 강도와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 신진욱, 정세은, 장지연(2016), 「다중격차의 사회적 균열 구조와 사회정책적 대응」, 『동향과 전망 NO.97』, pp. 83 참고.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1>에 나온 곤충 그림 예시처럼, ‘분할’은 서로 다른 계층의 개인이 흩어져 있는 것이고, ‘갈등’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개별적 갈등이며, ‘균열’은 다수의 개인이 집단적으로 모인 범주 간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림 1> 분할, 갈등, 균열의 비교



(출처: 신진욱(2017), 「왜 불평등의 심화는 계급균열로 이어지지 않는가? - 후발 민주화 사회에서 균열형성 지체의 역사적 조건」,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NO.32』, pp. 90)

어떤 ‘분할’된 차원이나 일시적인 ‘갈등’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개별적 갈등은 집단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사회적 격차, 불평등, 양극화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중격차가 가진 입체적인 결

다양한 차원의 격차, 잠재적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구분선’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우리’와 ‘적’의 구분, ‘연대’와 ‘대립’의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중격차는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사회 불평등을 이루는 축은 하나가 아니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고소득과 저소득’, ‘자가 보유와 임대 거주’, ‘고자산과 저자산’, ‘고학력과 저학력’, ‘서울과 지방’, ‘남성과 여성’과 같이 대표적인 8가지 축 외에도 다양한 불평등의 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그림 2〉 대표적인 8가지 불평등의 축



(출처: 발표자 제공)

각기 불평등의 축이 심화되고 완화되는 구조적 흐름 또한 직선적이지 않고 복잡하며 입체적입니다. 경제적 격차 중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등은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들 국가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낮고 노후 복지, 고용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이 주는 충격이 완충됩니다. 반면 한국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고 공공복지에 취약한 나라입니다. 2018년 이후로 평균 기대수명은 83.3세로 높아졌고³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평균 연령은 49.3세로 떨어졌습니다.⁴ 자산 기반 생활 보장이 더욱 중요해진 현 상황에서 자산 불평등이 조금만 높아지더라도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 적대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집단적 균열이 폭발하는 다중격차의 응축 지점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또 다른 불평등의 축인 교육, 지역 격차 역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1980년대에 고교 졸업자 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30%대이고 대학 졸업 후 취업하는 비율이 20%대일 때는 대학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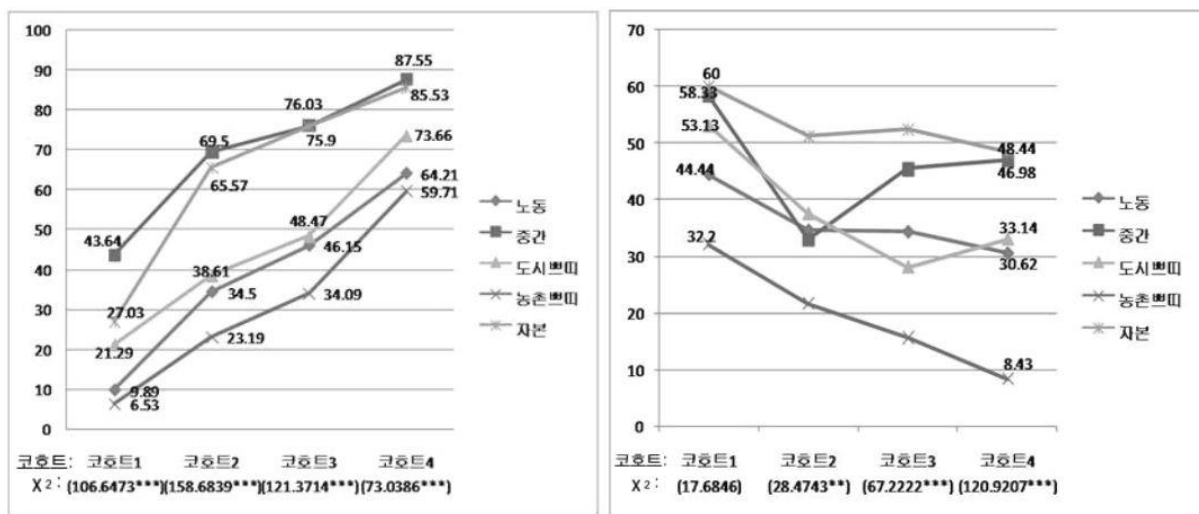
³ OECD(2021),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⁴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학률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져서 학력보다 학벌이 중요해지는 ‘중첩된 교육 계층화’가 발생했고, 교육 계층화의 성격 변화에 따라 지역 격차 또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진학 여부가 이후 부모와 자식 간의 부의 세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림 3>과 같은 지표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왼쪽부터) 부모 계급별 대학 진학률, 부모 계급별 수도권 4년제 대학 진학률



(출처: 문수연(2016), 「교육 불평등 변화 양상 분석」, 『韓國社會學 50.5』, pp. 152, 156)

결국 다양한 차원의 격차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중격차 구조에서는 누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약자가 될 수 있고, 강자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 구조를 함께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불평등 외에도 타인이 겪은 불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연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야 합니다. 뒤엉킨 여러 겹의 적대를 풀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연결되는 장소인 시민사회에서 노동, 경제, 지역, 젠더 등 다중격차를 함께 풀어가면서 서로 더 깊게 이해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중격차를 함께 풀어가는 다중적인 정체성, 연대의 정신을 만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우리 시민사회, NPO의

[NPO 정보지식포럼 1차]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신진욱 교수님의 답변

“강연에서 분할, 갈등, 균열 이 3가지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갈등은 ‘개인적 갈등’이고, 균열은 ‘집단적 갈등’으로 이해했습니다. 집단적인 변화의 요구를 나타내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일시적인 갈등보다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갈등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떤 조건에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집단적 갈등으로 발전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진욱 | 균열은 갈등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일시적이며 사회의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데 비해, 균열은 집단적일 뿐 아니라 특별히 구조적, 장기적인 갈등을 의미합니다.

사회구조의 불평등이 집단적인 갈등으로 표현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서로 문제를 공감하고, 동류의식을 형성하며, 변화의 목표를 함께 구체화하고, 공동의 경험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차원의 격차 중 현시점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적인 사회 불평등이 있을까요?”

신진욱 | 고용, 소득, 주거, 자산, 성별, 교육, 지역 등 여러 핵심 격차 중에서 어느 하나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최근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특히 자산 불평등 문제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나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도 매우 빈번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젠더 이슈를 과거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나누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특정 세대에만 나타나는 양극화의 양상이 있을까요? 특히 청년 및 노년층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진욱 | 경제적 양극화는 거의 모든 세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2천 년대 내내 여러 면에서 세대 내 양극화가 가장 심한 연령대였습니다. 고령 노동 인구와 빈곤 노인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기도 합니다.

청년층은 특히 2010년대에 세대 내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계층과 매우 불안정한 계층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현재 50대인 1960년대생도 세대 내 양극화가 심합니다. 2000년대 초반의 부동산 폭등을 거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고 자산빈곤층은 1940~50년대생보다 더 많습니다. 소득 불평등 역시 전체 세대 평균보다 더 심합니다. 현재 30~40대인 1970~80년대가 세대 내 불평등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합니다.

“강연에서는 주로 NPO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중격차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외에 다중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해서 해외 선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진욱 | 다중격차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외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부에 이 문제를 함께 다루는 평등과 인권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다중격차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차원의 격차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단순히 나누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비정규직 여성, 중소기업 정규직 남성, 소득빈곤 자산부자 계층, 고소득 임대생활 계층 등 복잡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힘든 측면만 호소하고 다른 측면에서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연대가

[NPO 정보지식포럼 1차]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없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고학력 전문직 여성이 양성평등에는 민감하면서 저학력 남성 단순노무자의 생활고에는 관심이 없다거나, 청년 노동자 남성이 노조 활동에는 열심인데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폭넓은 연대와 공감을 사회적으로 형성해가는 데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1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양극화'

|발제 2. 문제는 위가 아니라 아래, 최저선이 없다.

황세원 / 일 in 연구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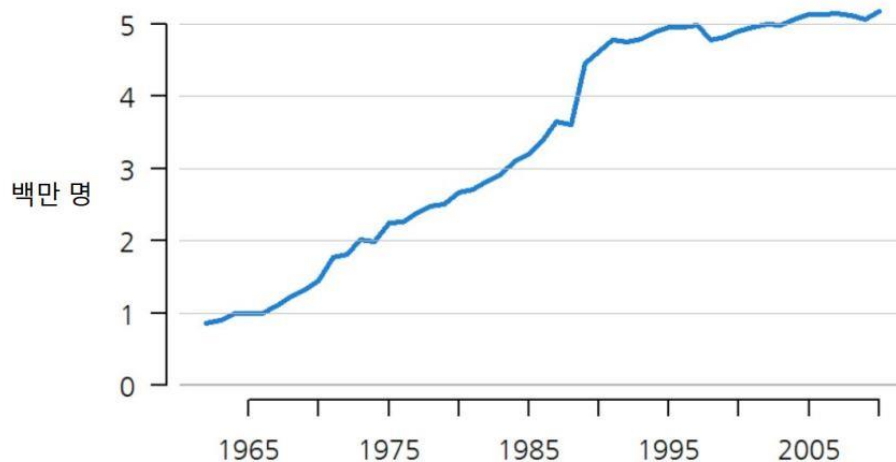
(포럼 일자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노동 문제 중 가장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현재 시도할 수 있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요동치는 일자리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내는 <그림 4>를 통해 지금과 다르게 낙관적인 1960년대 사회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경제활동인구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출처: 통계청(2010), 「국가통계포털-주제별 통계-고용·노동·인구-고용-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총괄(구직기간 4주/1주 기준)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 「지표로 본 서울변천」)

1987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방영했던 KBS 드라마 <TV 손자병법>⁵을 보던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가 자라면 최소한 대기업 사원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 기회가 확대 되면서 사환⁶으로 입사하더라도 야간 대학에 다니거나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정직원이 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는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OECD는 “한국 일자리 중 10%는 기계화 영향으로 사라질 것”⁷이라 예측했고,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고용 보호 사각지대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2억 5,500만 개가 증발했고, 기존의 유망 직업 등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도 붕괴했습니다. 집합근무, 장기근속, 평생직장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 시대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한 가지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리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불안정하고 나쁜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최저선의 보장 : 공정성은 답이 아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희소해지면서 자녀를 대기업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취직시키려면 국회의원, 금융지주 회장 ‘빽’까지 동원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청년 세대의 분노는 갈수록 높아졌고 ‘공정성’이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공정성’일까요? 우리 모두 한 방향으로 줄 서서 위만 바라봐서 답을 찾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림 5>의 그래프를 보면 정규직 분포는 67%이지만, 이때의 정규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규직이 아닙니다. 지속고용 전일제 일자리

⁵ 1987년~1993년 방영한 KBS 드라마. 종합상사를 무대로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등 직장인들의 삶을 코믹하게 다뤘다.

⁶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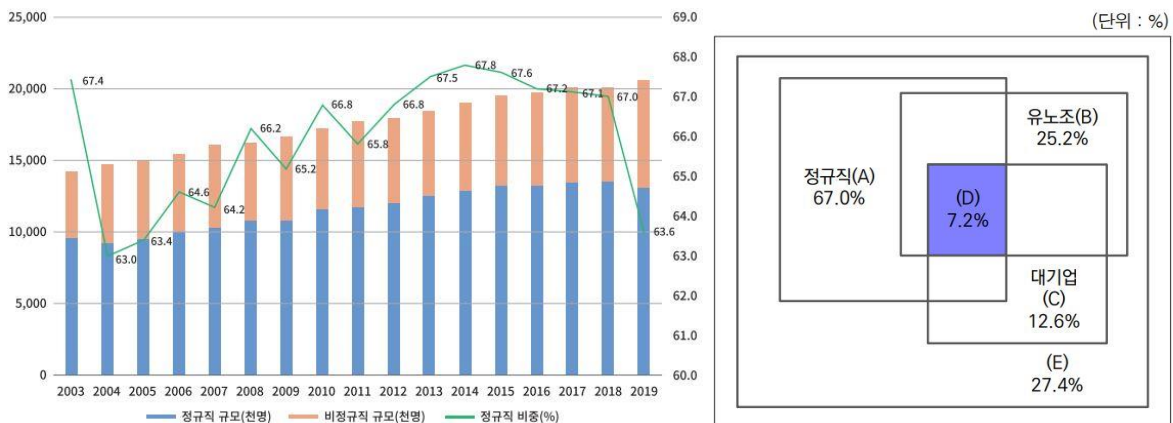
⁷ KDI-OECD(2021),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를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중에서 ‘사회적으로 괜찮은 일자리’ 비율은 7.2%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희소한 정규직 일자리에 줄 서서 들어가기 전에 정규직이 정말로 ‘좋은 일자리’가 맞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 순서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잘한 순서인데요. 이런 사회가 과연 정상일까요?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좋은 일자리에 장기근속, 평균 이상의 임금, 사내 복지는 물론, 사회적 안전망인 4대보험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격 등 너무 많은 조건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려고 너도나도 줄을 서는 것도 당연하지만, 문제는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림 5〉 (왼쪽부터) 2003~2019년 사이 정규직·비정규직의 규모 및 정규직 비율 추이, 정규직·유노조·대기업의 교집합으로 집계한 ‘노동시장 안에서 가장 괜찮은 일자리’(D)의 비율



(출처: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김복순(2019), 「최근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변화」,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p.129)

한 줄로 선 사람들 중에 뒤쪽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차별, 저임금, 무시와 하대, 위험한 환경, 긴 노동시간, 4대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 등 일자리 양극화가 너무 심한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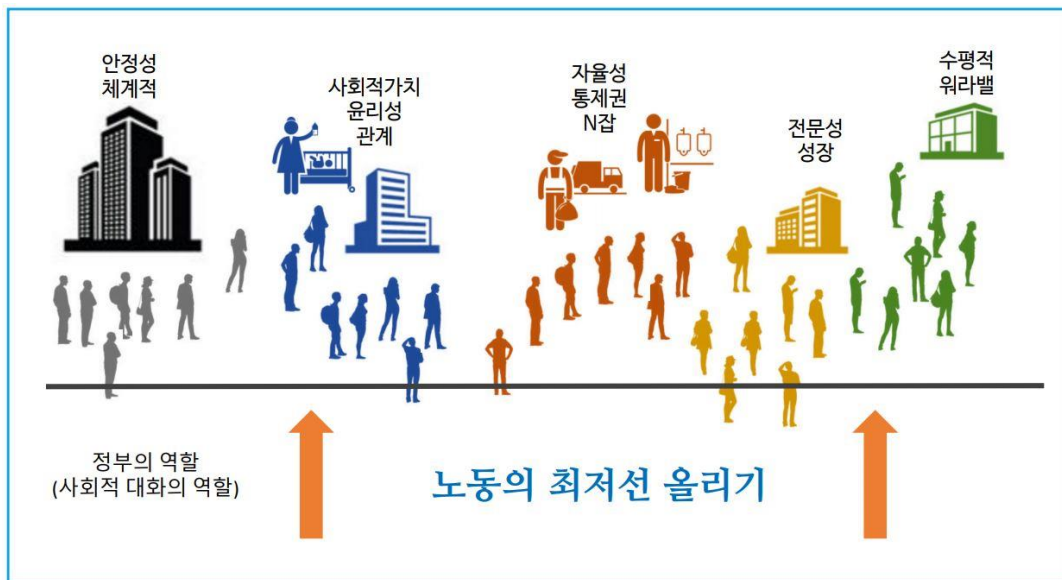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좋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대책을 세우더라도 그 효과는 어차피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이를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의 대책은 공무원 시험 준비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팬데믹 상황 역시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줄 선 순서대로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 누가 들어가는 것이 공정한가'의 문제에만 주목하면 양극화 문제는 풀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기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저선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최저선이 확실해야 다양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최저선을 확실하게 긋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사회 보장, 노후 대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누구도 그 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림 6> 노동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사회



(출처: 발표자 제공)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것은 최근 들어서, 특히 청년 세대 사이에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의 자율성과 통제권을 중시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으며, 소득원으로서의 일자리와 사회적 정체성을 분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N잡 등 일하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려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같이 달라져야 하는데, 다행히 편견 없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의 최저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몇 가지를 제시하자면 먼저 사회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전일제, 장기근속 노동자에게만 온전한 혜택이 전달되는 현재의 체계를 넘어서서 플랫폼 노동자, 단기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체계가 현재 논의 중입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최저선인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처벌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연대 시대의 ‘좋은 일자리’ 상을 버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 모든 일하는 형태를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I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황세원 대표님의 답변

“최근 청년들은 직장을 보고 일자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게 될 일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현 노동 구조는 여전히 일 중심보다 소속된 조직 중심으로 좌우되고 있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황세원 | 조직의 관점은 여전히 “조직의 필요에 따라 어느 자리에 데려다 놓아도 금방 적응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사람”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내부 변화가 별로 없었던 조직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한데, 전통적인 산업의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조직들이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첨예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하는 산업 분야의 조직들은 이미 ‘직무’ 중심으로 변화해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필연적으로 한 사람의 근속 연수는 짧아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통념에 따라서 ‘평생직장’에 가까운 큰 조직, 유명한(전통적인) 대기업, 공공기관을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조직들이 직무 중심이 아니라 조직 중심의 구조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정성, 사회적 위세 등을 중시해서 그런 조직에 들어가려 한다면 조직 중심의 구조를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무 중심, 성장 지향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최근 발전 중인 새로운 산업의 기업, 벤처, 구성원들이 대체로 젊은 조직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단기근속을 반복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영리조직과 비교했을 때, 고용 형태나 임금 격차 등 비영리조직에서 진행되는 노동의 양극화 현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황세원 | 비영리조직의 범위를 넓게 본다면 이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의 공익재단과 소규모 시민단체 간의 조직 규모, 임금, 근로조건, 근무시간 등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각 조직 내에서도 양극화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조직은 대체로 노동조합과 같이 임금과 근로조건을 높일 수 있는 노사 간 대화 및 협상 기구가 없어서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과 제조업 부문의 임금이 높은 것은 단지 그 산업 특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업 및 산업 노동조합들이 매년 임금 인상을 단 몇 퍼센트라도 하기 위해 치열하게 줄다리기와 협상하고 투쟁한 결과가 수십 년 누적되면서 높아진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그런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산업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영리조직(시민단체)의 임금이 1980년대만 해도 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현재 차이가 커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영리조직에서 오랜 시간 일한 직원(활동가)들이 내부 승진을 통해서 대표 및 임원이 되는 것보다 영리 부분에서 성과를 보인 사람이나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영입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리더급과 직원(활동가)급의 임금 차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기존의 근무 환경이 많이 달라졌는데, 조직 내 근무 방식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통제성이 높아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황세원 | 유일한 방법은 노사 간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최대한 자주 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사’의 개념이 명확해야 합니다. 비영리조직에서는 직원들도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임원진도 ‘나는 평생 노동자 편에서 살았다’는 식의 생각으로 ‘사측’ 역할을 거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중 정체성을 가진다는 사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비영리조직의 직원은 하는 일(Task)이나 지향성은 ‘활동가’인 동시에 그 조직 안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다는 점에서는 ‘피고용자’이자 ‘노동자’입니다. 비영리조직의 리더 역시 ‘활동가’인 동시에 그 조직에서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공통된 지향성을 가지고 함께 일하더라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원에서는 ‘노사 관계’의 자리에 선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대관계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그 조직이 본연의 목적과 비전에 맞춰서 발전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조직의 리더 역시 ‘자본가’가 아니라 조직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며,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노사는 대화를 통해 조직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의 근로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자주 대화를 하면서 당장 고치고 싶은 것들(야근하지 않는 방법, 재택 기간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등)부터 일 년에 하나씩이라도 개선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조직의 여건이 훨씬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대기업 노조, 소위 ‘귀족 노조’라 불리는 기성 노조에 대한 반발로 MZ세대 노조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대기업 노조가 파업으로 더 많은 혜택을 얻을수록 하도급과 비정규직이 소외됨에 따라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황세원 |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노동조합에는 분명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노동조합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기반한 조직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자였던 홍준표 의원도 귀족노조는 비판했지만, 노조가 필요한 조직들에 대해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서 조직률을 현재의 12%에서 3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공공기관 등 노조들이 정규직 직원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임금과 근로조건 이외의 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설 경우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파업을 해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합법파업 인정을 못 받을 경우, 사측에 의해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하므로 노동조합들이 조합원의 임금과 근로조건만 높이려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떠나 기존의 오래된 노동조합들이 보수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합원 고령화 추세에 따라 중장년층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소수자인 청년 세대를 소외시키기는 현상도 보입니다. 정치적, 이념적 경직성을 가지기도 하고, 낡은 '투쟁'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청년 노동자들의 외면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년 세대가 자신의 지향에 맞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이것이 '세대교체' 또는 '혁신'의 방향이라기보다 선배 세대의 '노동운동'에 대한 거부나 반발로 읽히는 것은 어느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연대를 어렵게 만드는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 이를 악용하는 세력 등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간에 큰 폭의 연대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의 주장을堂堂하게, 논리적으로, 선명하게 제시해서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양극화'

|발제 3. 불평등의 시대를 건너가는 다리

이원재 / LAB2050 대표

(포럼 일자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 수준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수준이 훨씬 커졌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내 삶의 차이보다 나와 내 자식의 삶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 사회, 우리는 이런 속도를 '기하급수적'이라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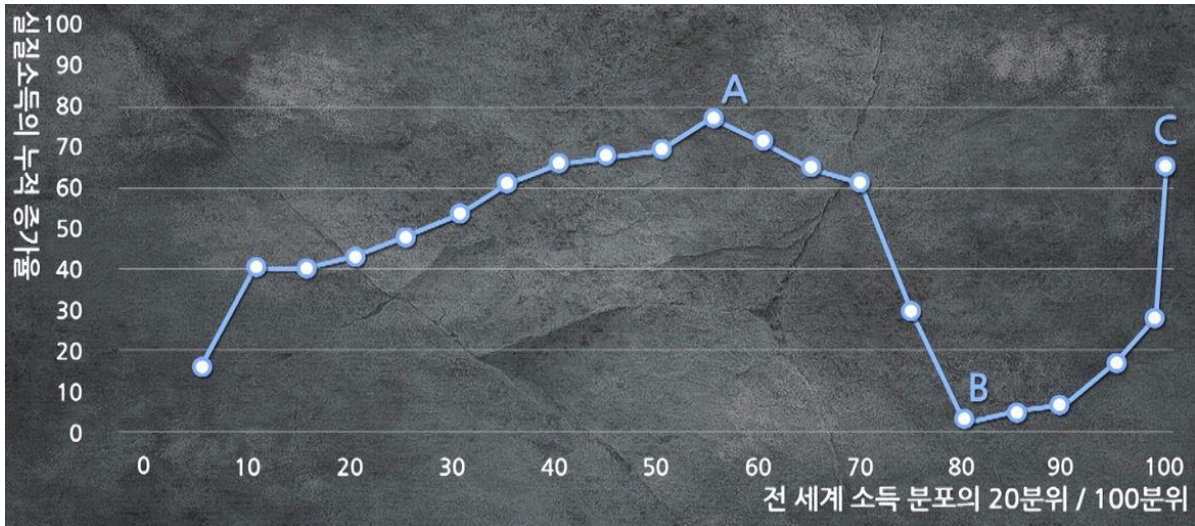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 그리고 불평등

한국은 기하급수적 분포 곡선의 맨 끝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40년 사이에 3~4배로 증가했고, 지난 1,800년 동안 성장한 속도보다 최근 3~40년 동안 성장한 속도가 수백 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비극인 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불평등 속도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7>과 <그림 8>을 통해 1988년부터 20년간 전 세계 소득 수준별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 대비 상위 10% 집단의 소득비중을 비교해보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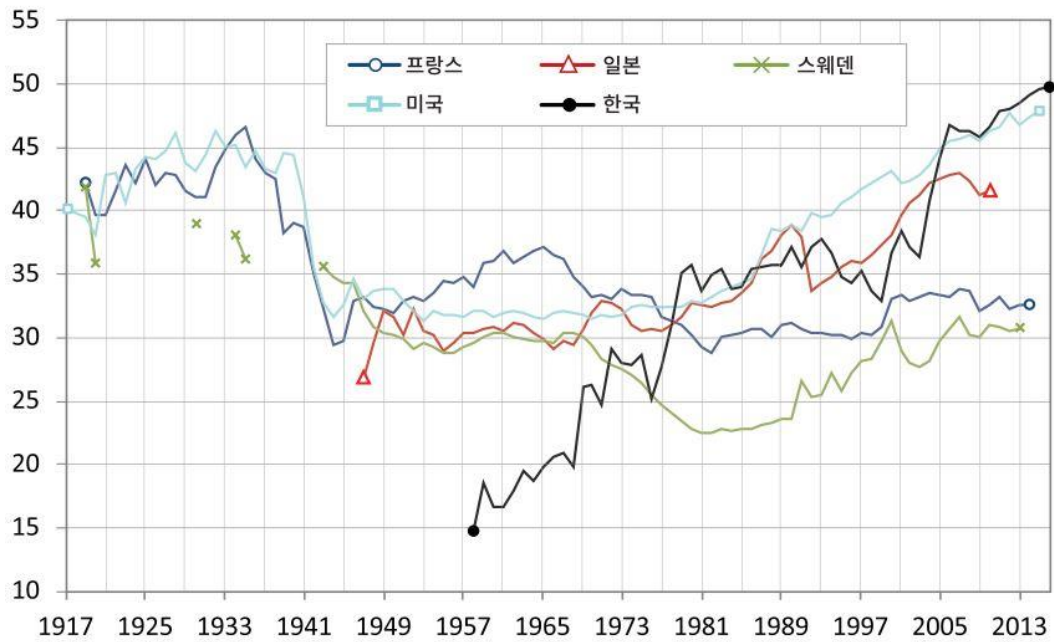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그림 7> 1988~2008년 전 세계 소득 수준별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단위: %)



(출처: 라크너와 밀라노비치의 2015년 연구)

<그림 8> 상위 10% 집단 소득비중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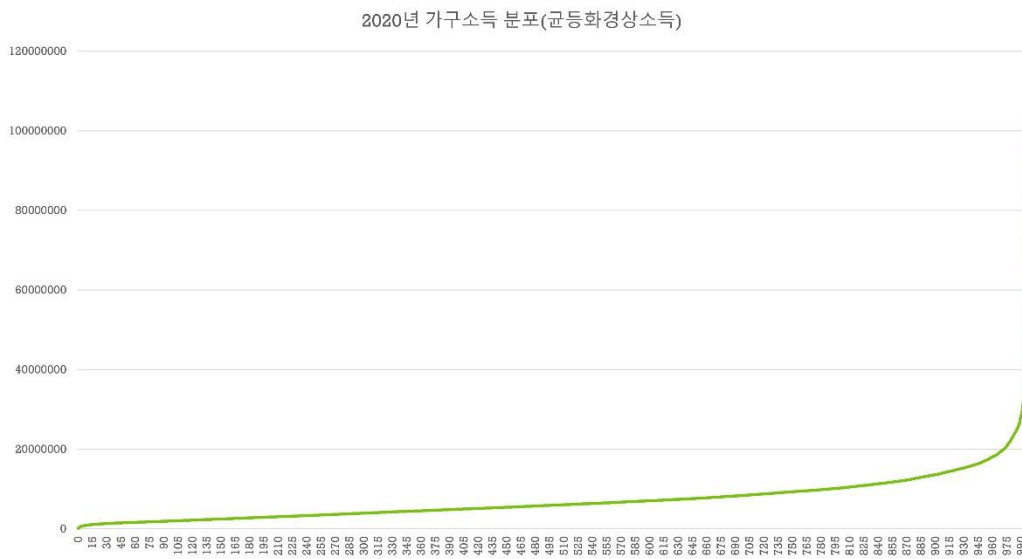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출처: 이원재·윤형중·이상민·이승주(2019),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LAB2050, 인사이트 2050-09, pp. 5)⁸

특히 <그림 9>와 <그림 10>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2020년 가구소득 분포 그래프와 세계 GDP 성장 그래프 모양이 비슷합니다. 끝단에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기하급수적 분포, 격차의 모양을 볼 수 있죠. 최근 부동산 자산 분포에 대한 연구⁹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죠. 소득 격차가 누적되면서 자산 격차가 나타나고, 자산 격차는 세습을 통해 축적되면서 심화됩니다. 한국 특유의 학벌 사회는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속도에 더욱 영향을 끼칩니다. 부동산 상위 계층은 고학력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자산 격차는 순환 및 확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9> 2020년 가구소득 분포(균등화경상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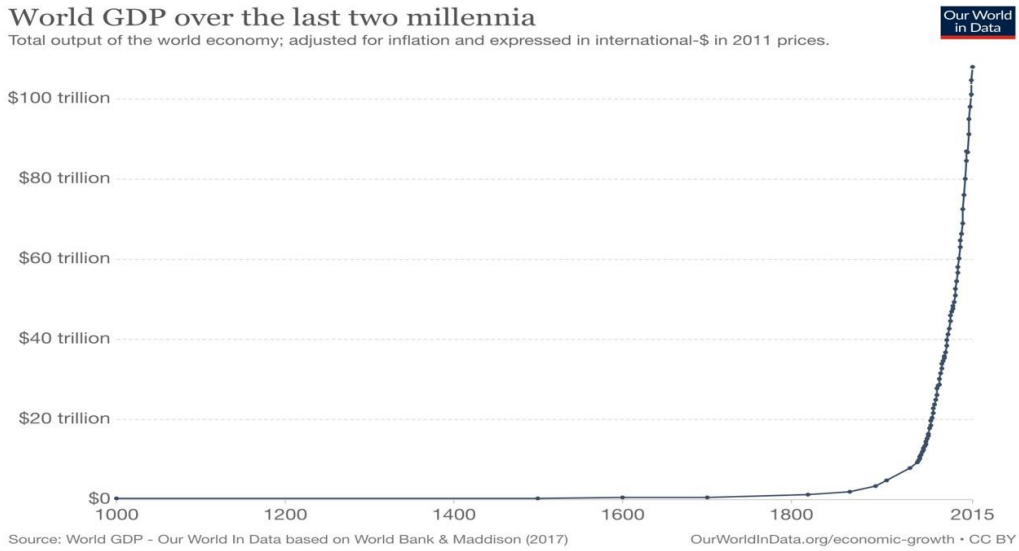
⁸ 홍민기(2019),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비중」,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pp. 63-65 참고.

⁹ 이원재·고동현·김민진(2021),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한국 부동산 계층 DB로 본 계층별 사회경제적 특성」, LAB2050, 인사이트 2050-09.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출처: 통계청(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10〉 World GDP over the last two millennia



(출처: World GDP - Our World In Data Based On World Bank & Maddison(2017),

www.ourworldindata.org)

경제 실험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묻다

이런 현상은 과연 소위 나쁜 사람들의 독점과 착취가 누적되면서 구조적 격차가 벌어지는 ‘공정성의 문제’ 때문일까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50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든 참여자는 100만 원씩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매일 무작위로 다른 1명에게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잔고가 0이 되면 더는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1만 원을 주고 나도 1만 원을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는 ‘100% 가위바위보 운’으로 결정되는 경제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흥미롭게도 우리 현실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똑같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많은 사람이 줄어들고 돈이 적은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상위 1%와 나머지 99%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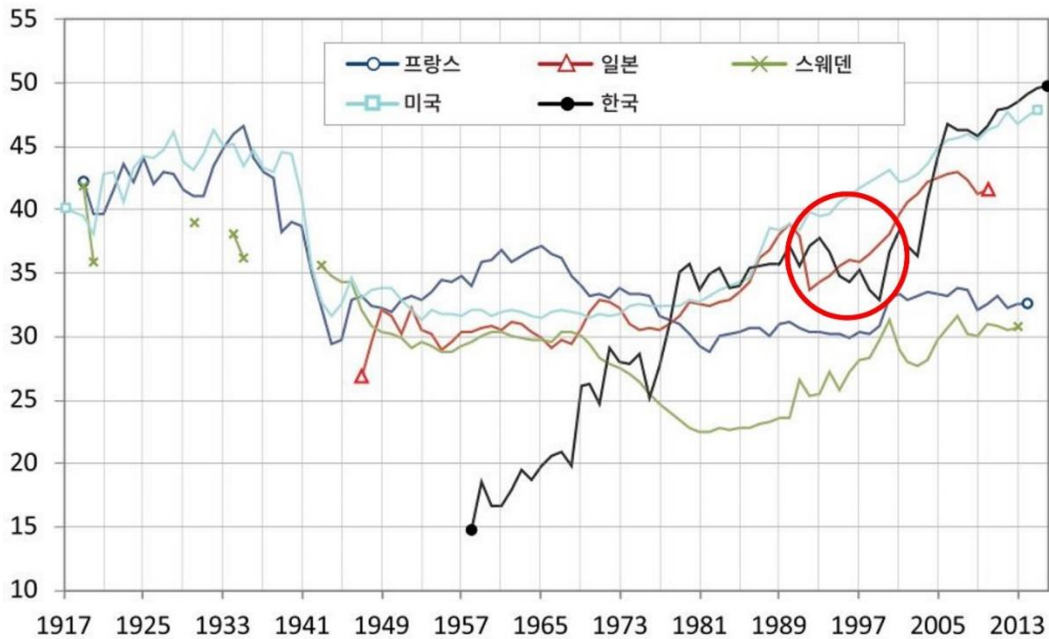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기하급수적인 불평등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윌렌스키가 발견했고 많은 학자들이 이를 입증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실험이 현실이라면 비도덕적으로 불공정한 문제는 바로잡되,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평등 확대를 교정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불평등 확대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과연 가능한가?’, 두 번째로 ‘어떻게 가능한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먼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11>에서 한국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 그래프를 보면 1987~1997년까지 10년간 내려가는 구간이 보입니다.

<그림 11> 상위 10% 집단 소득비중 국제 비교 (한국 1987~1997 구간 표시)¹⁰



1987년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시민의 힘과 민주화 운동으로 정권을 바꿨고, 노동운동이 생겼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복지라는 개념이 생겼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생겼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났고 진전이 생겼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¹⁰ 출처는 앞 페이지(pp. 9~10) 참고.

[NPO 정보지식포럼 1차]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경제 실험에서 기본소득제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걷는다면 소득 분포 결과는 기하급수적인 분포가 아니라 정규 분포의 형태가 됩니다. 중산층이 많아지고, 능력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서로 지속적으로 도우며 살 수 있는 '괜찮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결국 시민의 힘에서 온다

다시 말해 구조적인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지금보다 괜찮은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NPO가 해야 할 역할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GDP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종류의 성장, '잠성장'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한 줄로 서서 바라보던 방향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줄로 서야 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삶의 기준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 힘은 과거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듯이 시민의 힘에서 나옵니다. 당장은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지표를 보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거슬러 올라간 과거에서 희망을 본 것처럼,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1차]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I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이원재 대표님의 답변

“LAB2050에서 GDP 대안으로 ‘참성장지표’를 개발 및 발표하셨는데요. GPI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사회의 특수성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지표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원재 | 참성장지표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의 가치, 인적자본의 가치, 일과 여가의 가치, 디지털 가치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사회발전지표입니다. 기존에 연구되던 GPI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 사회에 맞춰 세부 지표와 데이터를 보완해 개발한 지표입니다. 양적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가정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위기, 불평등, 장시간 노동,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GDP를 보완하는 지표를 거시사회발전지표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참성장지표를 연구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과 지구환경과 여가의 가치와 사람 및 디지털의 가치를 양적 경제성장만큼 중요하게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양극화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기본소득 정책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진보/보수 진영이 제안하는 기본소득 안은 증세 찬반 등 조금씩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원재 대표님이 보시기에 유의미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중요 요건은 무엇일까요? 중요 요건이 일부 고려되지 않더라도 기본소득 실험을 지속해나가는 게 더 유의미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이원재 | 기본소득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조건성’입니다. 조건 없이 보장된 생계수단만이 사람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며, 이런 실질적 자유야말로 기본소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오랜 시간 동안 완성되어가야 할 제도이므로 불충분하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요건은 처음부터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상호 보건사회연구위원의 분석¹¹에 따르면, 기본소득보다 차등 복지를 제공하는 ‘부의 소득세’가 불평등 완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원재 | 기본소득제와 다른 공적부조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의 소득세 등 선별급여의 경우 완벽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급 방법의 현실성을 확인한 기본소득제와는 달리, 부의 소득세 등의 선별급여는 지급하려는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이 아직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이 해결되어야 논의가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돌봄 양극화, 디지털화 정보 격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 계층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강연에서 말씀하신 대안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지, 혹은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이원재 |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과세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이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 일단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

¹¹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289768Y 참고.

[NPO 정보지식포럼 1차]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각합니다. 물론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 이외에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은 별도로 다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감을 높이며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양극화'

I발제 4. 일극 중심 사회에서 지역 공생 사회로

하승수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포럼 일자 : 2021 년 10 월 12 일 화요일)

‘일극 중심 사회’는 서울 중심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강연에서 일극 중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공생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어있는 집과 사라진 학교들

일극 중심이 낳은 모습 중 하나는 농촌 인구 문제입니다. <표 1>을 보면 서울은 주택보급률이 100%에 못 미치는 96%인 반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충청남도는 113.3%로 가구 수에 비해 주택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1> 서울, 충남, 전남, 경북의 주택보급률

구분	2019		
	가구 수	주택 수	보급률(%)
전국	20,343.2	21,310.1	104.8
서울	3,896.4	3,738.6	96
충남	864.1	978.7	113.3
전남	741	842.1	113.6
경북	1,102.9	1,293.3	117.3

(출처: 통계청(2019), 「주택보급률」)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충남 홍성군의 군 전체 주택보급률은 110.4%인데, 도시화되지 않은 면 지역(홍동면 119.7%, 금마면 119.4%, 장곡면 118.7%)은 120% 가까이 됩니다.¹² 전국에 151만 채의 빈집이 있는데, 202만 가구가 사는 면 지역은 전체 주택 210만 채 중 빈집이 31만7천 채로, 빈집 비율이 15%입니다.¹³ 결국 한국 국토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하는 면 지역 중 30만 채 이상이 빈집인 상태로, 농촌 지역에 집은 있어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긴 또 다른 문제는 폐교입니다. 우리나라 시·도 중 가장 많이 폐교된 지역은 전라남도로, 폐교된 학교 수는 총 833개¹⁴이고 도시가 아니라 주로 농촌 면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학교가 모자라서 새로 짓는 반면, 농촌 지역은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농촌의 인구 및 폐교 문제는 통계 자료를 보는 것보다 농촌에 직접 가 보면 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역행하는 현주소

일극 중심 사회가 낳은 문제를 농촌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논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양극화 문제는 양극의 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울과 농촌이 아닌 서울과 부산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지역 분산 논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국토 면적 73%에 달하는 전국 1,182개 면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 5,178만 명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¹⁵ 서울시 강남구 인구가 56만 명인데 강남구보다 면적이 3배¹⁶인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의 인구는 2,4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중심 사회가 농촌 인구의 유출 및 감소를 낳았고, 결국 대한민국 내에 심각한 인구 밀도 차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 시대에 이런 방식의 일극 중심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현재 한국의 전

¹² e-나라지표(2020), 「2020 홍성통계연보」.

¹³ 통계청(2020), 「주택총조사」.

¹⁴ 지방교육재정알리미(2021), 「시·도교육청 폐교재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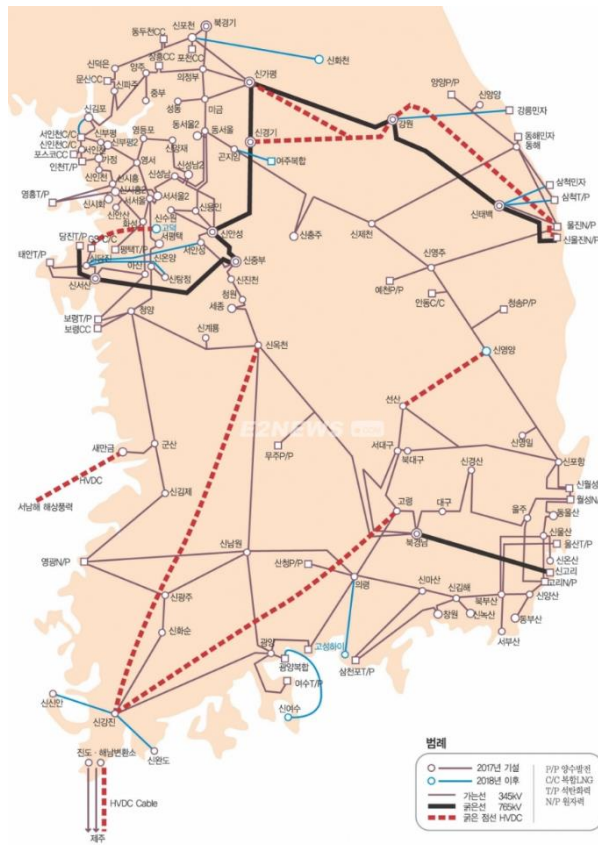
¹⁵ 전국 1,182개 면의 인구는 총 467만 8천 명.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참고.

¹⁶ 서울시 강남구 면적 39.5km²,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면적 146.7km².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력 시스템은 바닷가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거미줄처럼 이어지는 송전선에 의지해서 수도권에
 쏠린 전력 수요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여나가야 하
 는데,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앙이 발생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송전선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석훈 박사의
 소설 <당인리 발전소>¹⁷에 나온 대로 대한민국이 블랙아웃되면서 ‘공멸’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12> 제8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출처: 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64)

¹⁷ 전라남도 나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블랙아웃된다는 내용. 수도권 중심의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쓰레기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외부로 배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사회가 지속 가능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껏 논의된 균형발전론은 서울 닦기에만 급급했고, 기후위기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중앙의 자원을 가져오는 것에 매몰되었고 농촌을 소외시키는 또 다른 불균형개발론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산과 울산은 도시이지만, 경남은 광범위한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된다고 해도 경남의 서부 농촌 지역과의 불균형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지역 공생 사회로 이끄는 길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공생 사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일극 중심 사회를 낳은 중앙집권적 정치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를 연방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국,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여러 민주주의 선진 국가들은 이미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부울경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부울경을 연방주로 만들고 권한과 재정을 분산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읍면 자치’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1961년 이전의 지방자치는 읍면 단위로, 읍장, 면장, 읍의회, 면의회를 주민 직선으로 구성했으나 5.16 군사 정변 이후로 읍면 자치가 말살됐고 현재의 군 단위 행정구역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 복구되지 않았던 읍면 자치가 부활해야 농촌 주민들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주목받는 에너지 자립 마을 중 하나인 독일 쇠나우(Schoenau im Schwarzwald) 마을도 인구 4천 명 정도로 구성된 읍면 정도의 작은 지역입니다. 한국과 달리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마을의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서울을 선호하고, 서울에서 살기를 원하는 한국 사회에 한 가지 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표 2>를 보면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상위 15개 지자체가 충청남도 계룡시를 제외하고 모두 군 단위입니다.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표 2〉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상위 15개 지자체

No	시도	구군	삶의 만족도
203	경상북도	고령군	1
174	전라남도	보성군	0.999
206	경상북도	예천군	0.9988
202	경상북도	청도군	0.9963
218	경상남도	의령군	0.9962
158	전라북도	진안군	0.9947
160	전라북도	장수군	0.9946
142	충청남도	계룡시	0.9917
146	충청남도	서천군	0.9854
59	인천광역시	옹진군	0.9803
181	전라남도	함평군	0.9695
121	강원도	양구군	0.9673
157	전라북도	완주군	0.9652
225	경상남도	함양군	0.9565

(출처: 국회 미래연구원(2021), 대한민국 행복지도)

서울에서 살기를 선호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 주입된 ‘서울 선호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역 공생 사회를 위해 NPO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우리부터 서울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야마시타 유스케 작가의 책 <지방회생>에 나온 글을 일부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도화 도시로의 과잉 집중은 사회관계의 풍부함을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도시화에 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서열의 역전’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머릿속에 주입된 서울 중심의 서열 구조가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장애 요인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봐야 합니다.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I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하승수 대표님의 답변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결국 ‘연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연결의 맥이 끊긴 경북에서 활동 중인 활동가는 혼자 중앙의 연결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끊어진 지역 간의 연결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활동가 영역에 대입해서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승수 | 결국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연결될 때 힘이 나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앙 또는 서울과 연결해서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의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됐던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역화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승수 | 지금 흔히 지역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거라서 계속 순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순환하는 의미의 지역화폐는 작은 지역 단위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 홍성군에서는 홍동면을 중심으로 ‘잎’이라는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화폐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권처럼 계속 유통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화폐’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시·도 정부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1차]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1월부터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칭한다고 하는데요. 서울 중심으로 중앙집중화되는 메가시티론처럼 특례시 지정이 과연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지역 격차를 더 심화시킬지 궁금합니다.”

하승수 | 특례시 지정은 단편적으로 특례시에 한해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인데, 지역 내부의 민주주의가 강화되지 않으면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편적인 접근법보다는 근본적인 자치·분권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접점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은 지역 양극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까요? 귀농·귀촌하는 형태 외에 다른 접근 방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승수 |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변화의 접점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 양극화라는 용어보다는 일극 중심(서울 중심)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양극화는 결과이고, 원인은 일극 중심(서울 중심)에 있으니까요.

일극 중심 사회가 된 것은 제도와 구조의 탓도 크지만,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우리 의식까지 지배하게 된 일극 중심에서 벗어나고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즉, 내 머릿속에 자리 잡은 '서울 중심의 서열화'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상과 삶을 접하고 시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사람, 공간 등 지역사회와의 접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1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양극화'

|패널 Talk. 사회 양극화를 좁히기 위한 핵심 쟁점을 논하다¹⁸

: 노동, 경제, 지역 3가지 분야의 연사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나눈 대담¹⁹

(일시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17:25~17:55)

참여 연사	참여 패널
황세원 일 in 연구소 대표	김창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대표
이원재 LAB2050 대표	김양희(치자)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
	고정근 연구활동가
	강남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노동] 진정성 있는 을의 연대, 노동의 최저선을 위해서

김창수 | ‘우동(우리동네노동권찾기)’은 동대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노동 조합이 지역과 잘 만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고, 노동권 교육을 통해 노동권이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노동권 강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직접 배달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배달노동자 내에서도 오토바이를 이동수단으로 한 전업 라이더와 도·자·킵(도보·자전거·킵보드)을 이동수단으로 한 겸업 라이더 사이에서 배달 건수 경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또 최근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내의 노조 간 가입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필수 노동자’ 직군 중 하나인 요양보호사들의 노조 조직이 불발되기도 했는데요.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에 앞서, 어떻게 하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자들의 조직, 노동자들 간의 ‘을의 연대’를 이뤄낼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¹⁸ 포럼 사회 및 진행: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¹⁹ 포럼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행된 질의응답을 노동, 경제, 지역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재구성했습니다.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황세원 |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비슷한 일일지라도 이해관계가 무척 달라졌고 전통적인 노동 운동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노조 조직물은 정체됐지만 목소리를 내는 활동이 많아진 것은 낙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SNS 활동을 비롯해서 청년유니온, 라이더유니온 등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이 많아졌는데요. 꼭 전통적인 노조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노조의 형태로 조직해서 내는 목소리는 모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수렴해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드는 전문성은 기존 조직들에 있으므로 ‘연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통해서도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냄으로써 하나씩 바뀌어나가는 경험을 하면 자신감과 신뢰가 생기고 그다음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부터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대화로 풀어나가는 활동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치자) | 황세원 대표님의 ‘노동에 최저선이 필요하다’는 강연을 듣고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최저선으로 성평등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조사²⁰에 따르면, 한국은 OECD 주요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크며, 여성은 남성보다 34.1% 정도 임금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치가 과연 정당한지를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평등한 문화가 없는 조직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성들은 많이 경험해봤을 테고요. 노동의 최저선에도 성평등한 문화, 성평등한 일자리를 넣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세원 |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저선을 이야기하면 보통 최저 임금만 생각하는데, 그 밖에도 인권, 안전 보장 등 우리가 일하는 세세한 조건을 포함한 개념을 의미합니다. 2020년 8월에 했던 연구²¹에서 한 여성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조건으로 ‘안정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안정성의 정확한 의미를 물어봤더니 “제 입장에서는 성차별 없는 직장이 안정성 있는 직장

²⁰ OECD(2021), 「고용 전망(Employment Outlook)」.

²¹ 황세원(2021), 「구직자에게 월급보다 중요한 조건이 있을까?: 랩 실험을 통한 청년 세대 일자리 지향 탐색 연구」, LAB2050, 인사이트 2050-07.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여성 응답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취업을 준비해서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경력 단절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성이 오래 일할 수 없는 ‘성차별 있는 직장’은 안정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 조건을 쫓아보면 다른 측면이 보입니다. 현재 청년들이 공기업,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공무원 시험만 보는데, 그게 정말로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더 큰 규모의 직장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처럼요. 여성을 비롯한 청년 구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조건을 적극적으로 듣고 세세하게 정책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2. [경제] 참된 성장, 다양한 욕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삶

정택수 |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값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는 30평형 서울 아파트 시가가 6억 2,0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1억 9,000만 원이 됐습니다(2021년 5월 기준).²² 2011년 초에 노동자들이 평균 18년 치 임금을 꼬박 모아서 30평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 2021년에는 33년 치 임금을 모아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집값 폭등 문제로 인해 민원 전화로 안타까운 사연을 호소하는 사연자가 많습니다. 일례로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집값 잡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강남 아파트를 팔고 부천으로 이사 간 분이 있는데 집을 팔자마자 10억이 올랐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가정불화를 겪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사연이 왔습니다. 한편 원정 투기꾼들이 몰려다니며 ‘아파트 사재기’ 하는 투기 양상은 더욱 성행하고 있죠. 이러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²²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2021),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11만 5천 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pp. 2.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이원재 |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으로 이사 간 사연자는 집값에 변동이 없었다면 과연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것은 ‘재산의 문제’와 ‘집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은 비용을 지불한 재산이지만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죠. 하지만 집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비용을 지불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은 게 정책 당국자들의 큰 실책이자 현 정부의 실책, 우리 모두의 실책입니다. 우리는 재산이 없더라도, 주어진 삶과 서비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올라서 집에서 생활할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지만, 집값이 떨어져서 후회되는 감정은 선택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거죠. 과거에 임금을 10년 치 모으면 살 수 있었던 집을 2~30년 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건 두 가지 문제가 엉켜 있으며, 대안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보유세를 높게 올리는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기 위해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집을 소유하는 것을 선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임대주택이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집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는 것입니다. 경실련에서 대안을 제시할 때도 공공기관의 불로소득 자체를 지적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개발과정에서 얻은 불로소득을 왜 집 없는 사람들에게 풀지 않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근 | 강연 발표를 쪽 들으면서 공감이가 가는 한편, 갑갑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을공동체에서 공동육아를 통해 첫째 아이를 초등학교까지 키웠는데요.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 대안적인 삶의 형태가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한 줄 서기’식 경쟁 사회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기도 쉽지 않고, 부모의 선택과 아이의 선택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기조 강연에서 신진욱 교수님이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의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환이 실제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과 불일치할 수 있겠다는 우려도 듭니다. 하승수 대표님이 얘기하신 지역 공생 사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시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인해 주말부부, 지방-서울 출퇴근 형태가 생겨난 것도 사람들의 욕망이 현실적 조건과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현실 세계 속 욕망과 불일치하면 다양한 영역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NPO 정보지식포럼 1차]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전환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단계에서 우리의 필요조건, 충족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원재 | 예전에 읽은 책에서 어떤 사람이 스님에게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정말 해탈하고 싶습니다.”라고 묻자 스님이 “해탈하고 싶다는 욕망을 버려라.”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고정근 활동가님의 질문도 욕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를 공동체 안에서 키우고 싶고 대안적 삶도 살고 싶은 마음 모두 욕망입니다.

다만 다양한 욕망을 방해하는 제도가 문제이기에 제도적 해법을 논하는 것입니다. 주거 보장 역시 모든 사람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과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적 해법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다르게 살아가는 대안적 삶의 형태를 위해 끊임없이 공간을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1987년 민주 항쟁 이후 마을공동체, 공동육아, 사회적 경제 등이 촉발된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가 에너지를 조직하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제 역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치자) |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부는 저렴하게 가져다 쓸 수 있고 착취할 수 있었던 식량, 환경부터 여성의 돌봄노동 등 여러 종류일 텐데요. 이제라도 그런 부분을 주목하고 값어치 있게 되돌리려는 시도가 진행되면서 성장이 아닌 ‘성숙’ 내지는 ‘탈성장’이라 불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선을 돌리고 살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입니다.

이원재 | 성장과 성숙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 고민과 맞닿아 있어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성숙’이라는 말 대신에 ‘참성장’이라는 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회환경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를 살고자 하는 욕망도 인간의 다양한 욕망 중 하나이며 확장된 의미의 ‘성장’임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성장 중에서 근시일 내에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와 함께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입니다. 돌봄에 대한 질을 높이거나 돌봄의 사회화, 돌봄 평등 등 성평등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지역] 지역 공생과 현실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가?

강남규 | 지역 문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청년에 속한 사람으로서 청년 문제와 연관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지역에 없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과거와 다르게 다양해졌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결국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테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지역을 한 도시로 묶는 ‘메가시티론’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 공생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 가능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하승수 | 메가시티론의 단점은 정치·행정 권력이 분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역사회 및 경제를 활성화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서울바라기’처럼 서울의 뭔가를 따라 해야 하는 과정에서 농촌은 더욱 소외될 것입니다.

강남규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공생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농촌이 살아야 하고, 농촌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농촌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농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일자리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일자리를 임금, 인권 등 괜찮은 조건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 역시 큰돈을 벌지 못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농민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본주택이 농촌에 공급된다면 주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괜찮은 삶을 보장하고 괜찮은 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농촌에 마련되면, 청년들이 유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자연스럽게 지역 공생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정근 | 지역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질문 내지는 우문을 던져보고자

[NPO 정보지식포럼 1차]

극단에 선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 노동·경제·지역의 관점에서

합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에너지, 먹거리, 폐기물 자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서울 중심 사회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승수 대표님께서 서울과 그 외 지역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청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승수 |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서울의 자립률을 높여야 합니다. 비록 서울의 100% 에너지 자립은 불가능하나 서울 곳곳의 공터에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등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게 지역 공생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베를린, 파리 등 유럽의 대도시들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볼 생각조차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양희(치자) |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 유입, 인구 분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농촌에 내려가서 사는 것도 다른 환경과 시간 개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성에게 있어서 귀농은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처럼 따뜻한 시골살이가 될 수도 있지만, '뭔가'가 빠지면 영화 <이끼>와 같은 스릴러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뭔가'를 캐치하고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승수 |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주여민회도 2019년에 3개 마을을 성평등마을로 지정하고 규약 표준안을 마련한 뒤로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을 규약은 농촌 지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다시 정비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마을 규약을 세워서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문화의 변화도 필요한데, 귀농·귀촌한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은 농촌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을 저도 분명히 느낍니다. 이전보다 성차별적 요인과 문화가 많이 사라져가는 긍정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2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발제 1.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 과학적·윤리적 이해

한재각 / 기후정의 연구활동가

(포럼 일자 :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그림 13〉은 기후위기 시대를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9월 26일, 브라질 상파울루주와 미나스제라이스주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모래 폭풍 '하부브'가 휘몰아쳤습니다. 이 폭풍을 목격한 사람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림 13〉 9월 26일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프루탈시를 덮친 거대 모래폭풍



(출처: www.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01601014)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사막 지역에서나 볼 것 같은 모래폭풍이 브라질을 덮친 것은 기후변화로 야기된 심각한 가뭄 때문입니다. 가뭄으로 바짝 마르고 열대우림이 잘려 나가 맨살이 드러난 땅을 거쳐 온 거센 바람이 모래 폭풍을 만든 것입니다. 세계 최대 담수 습지였던 브라질 판타나우 습지는 바짝 말라서 화재가 연속으로 발생했고, 총수면 면적의 74%가 감소했습니다. 물이 마르고 저수지가 사막이 되면서 호수의 최후의 웅덩이를 찾아왔던 물고기들 역시 폐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 미래를 연상케 했는데요.

기후위기의 현재, 그리고 불평등

과연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스웨덴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프랑스 국민의회(하원) 연설에서 8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이제 6년 반밖에 남지 않았죠. 이는 2018년 발간된 IPCC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 입각한 계산으로, 탄소예산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탄소 예산’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 C 이상 오르지 않으려면 넘지 말아야 할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의미합니다. 매해 42기가톤(Gt)이 넘는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약 420기가톤(Gt)의 온실가스만 배출해야 ‘1.5° C 목표’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6년 반 안에 모든 탄소예산이 바닥나고, 지구 평균 온도가 1.5° C를 넘어설 가능성이 2/3가 됩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매해 2030년까지 7.6%씩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온실가스를 줄여본 역사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를 겪었던 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일종의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로 온실가스가 줄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사고가 아니라 계획이 필요합니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계획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새로운 도전 방법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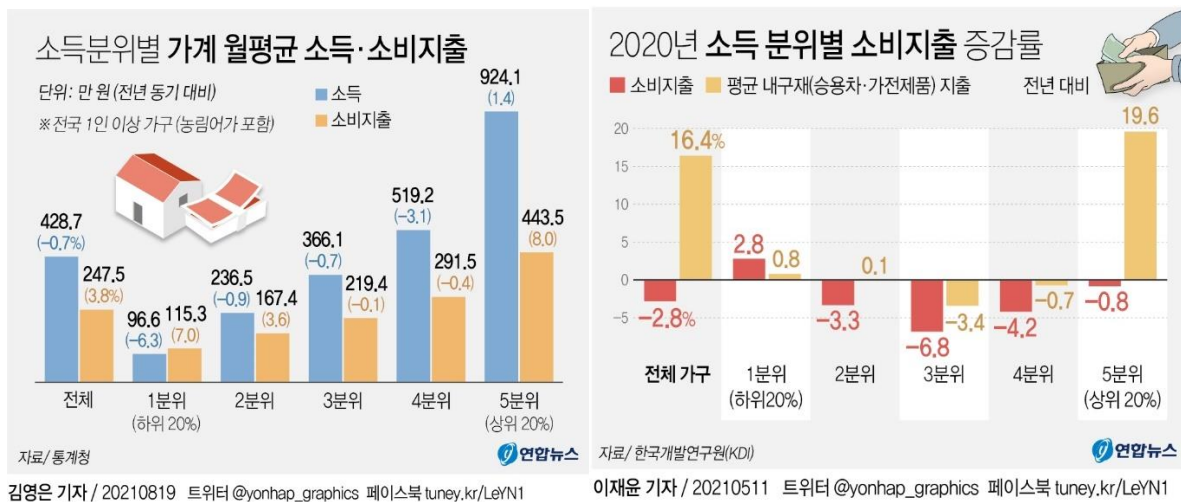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한편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며, 온실가스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국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입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소득 불평등과 소득 분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봤을 때, 상위 10% 소득계층이 소비 기반 배출량의 대략 50%를 차지하는 동시에, 전 세계 소득의 52%를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하위 50% 소득계층이 가져간 소득은 8%를 차지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략 10%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소득 불평등이 온실가스 배출 불평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자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후 부정의(Climatic Injustice)’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기후 불평등과 관련된 구체적 연구는 없으나, 소비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를 통해 짐작 가능합니다. 많이 소비할수록 당연히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14>에서 최근 통계 조사를 보면, 한국도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림 14> (왼쪽부터) 소득분위별 가계 월평균 소득·소비지출, 2020년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증감률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출처: 통계청(2021),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2021),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또한 코로나19를 겪은 2020년에 모든 계층의 소비가 줄었지만, 한국 상위 20% 소득계층만 평균 내구재(승용차·가전제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비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더 배출했을 것입니다. 재난 시기에도 부자들의 온실가스 배출은 더 늘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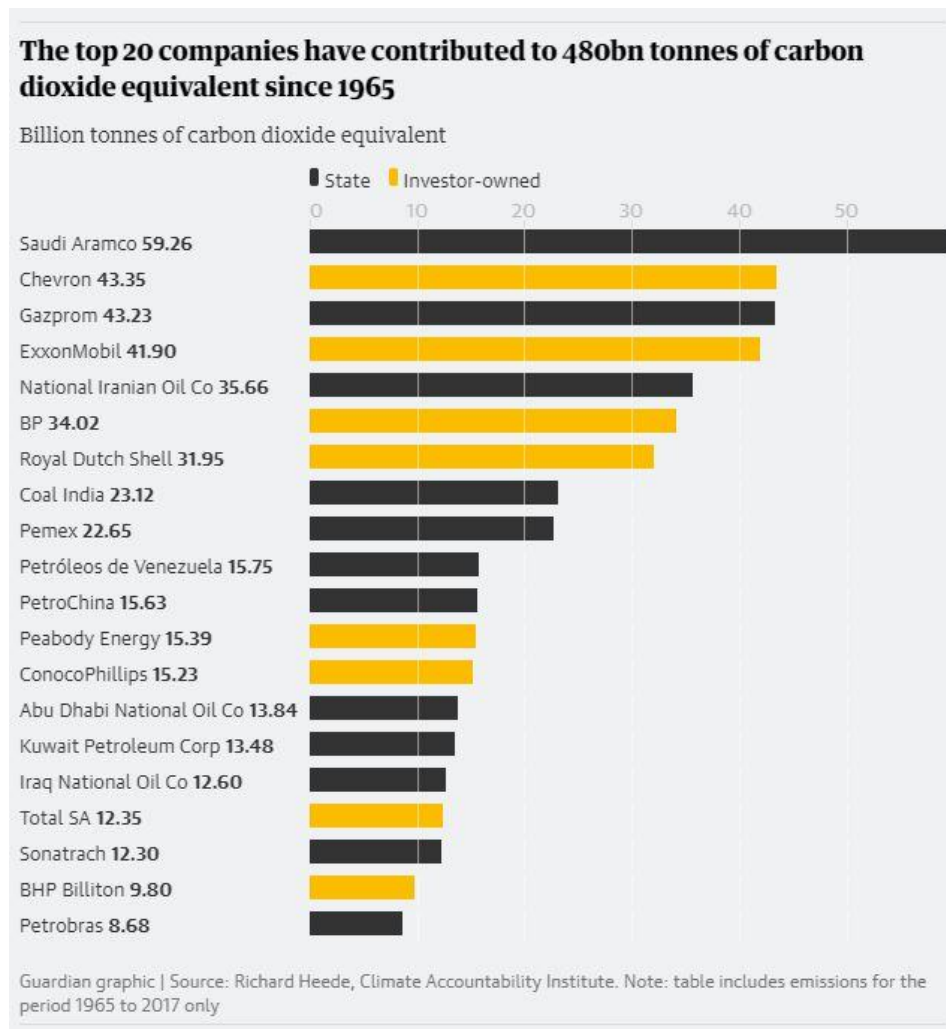
개인의 작은 실천, 이제는 넘어서야 할 때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실용적 불가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이상적이라 생각해서 미뤘던 방법을 모두 시도하는 ‘유토피아적 현실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정치적 결정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림 15>는 특히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20개 기업을 보여줍니다.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공급해서 돈을 벌고 있는 Saudi Aramco, ExxonMobil, BP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 인데요. 1965년 이래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의 35%에 이 기업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업이 100개라면, 그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온실가스는 8~9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팔아서 돈을 벌도록 내버려 둔다면 기후위기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비확산조약 요구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신규 개발 금지, 기존 생산의 단계적 폐쇄,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는 운동입니다. 1992년도 유엔기후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의 근원인 화석연료산업을 규제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강력한 국제조약을 세우고 거기면 처벌하는 운동을 벌여야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림 15〉 전체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20개 기업
(1965~2017년까지의 배출량만 포함)



(출처: Richard Heede(2017), Climate Accountability Institute; Guardian graphic)

사람들은 보통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사라고 말합니다. 전기차를 사면 정말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보다 자동차가 많아지고 교통량이 늘어나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동차 중심의 빠른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 예컨대 ‘15분 도시’와 같은 구조를 조성해야 합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주거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그린리모델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재개발·재건축 후에 본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거 빈곤층이 실제로 되돌아와서 살 수 있는 주거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가장 쉽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온실가스를 과감히 줄일 수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로 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운택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인 해결책인 거죠. 온실가스 해결책은 이러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능’하거나 ‘지금껏 존재한 적 없는’ 것을 추구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 비현실적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급진적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녹색성장, 그린뉴딜, 탈성장, 총 3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녹색성장과 그린뉴딜의 개념도 혼재되어 있고, 여전히 성장을 지속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못하면 기후위기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 아닌 삶, 성장이 없는 사회인 ‘탈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화석연료 생산, 군수산업 등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 복지, 교육, 돌봄노동과 같은 부문들을 육성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필수 노동으로 입증된 돌봄노동과 같은 직종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파괴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의 가치를 덜어내는 ‘정의로운 전환’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두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는 민간이 아닌 공공영역에 맡기고 보편적인 기본 서비스로 제공해야 합니다. 세대 상호 간의 재분배와 정의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어내는 탈성장의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요약이자 기후정의를 위한 몇 가지 토론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실용적 불가능주의가 아니라 유토피아적 현실주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거버넌스에 계속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탄중위해체공대위에서 탄소중립위가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내놓은 엉뚱한 결과물에 맞서 투쟁했는데요. 이제는 권력 내의 거버넌스를 거부하고 기후위기 최전선 공동체와 함께 하는 기후정의동맹을 구축하고, 가난한 자들의 환경주의를 복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운동의 힘으로 지금의 체제를 흔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술 경제적 접근, 즉 자본주의 성장체제는 그대로 두고 재생에너지 전환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은 이야기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화석연료 확산금지 조약과 같이, 누구를 패배시키고 무엇을 폐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고, 분노하고, 먹살을 잡는 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조용하고 멋진 얘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I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한재각 연구활동가님의 답변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의 46%가 기후위기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행동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답했는데요.²³ 시민 다수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재각 | 이미 꽤 많은 한국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각종 설문 조사에서도 90% 이상의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강의에서 만난 시민들도 “요즘 날씨가 이상해졌다”며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내외로 많은 기후재난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감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기후행동’을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한 위기감이 생겼다고 모든 시민이 행동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가정입니다. 내 행동 변화가 과연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 판단해봤을 때, 오히려 행동하지 않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은 비교적 쉽게 바꿀 수도 있지만, 어떤 행동의 변화는 개인에 따라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 태양광 설치에 동참하고 싶지만 자기 집이 아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고 싶지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라면 정치 행동에 제약이 많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넓고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언론, 교육, 예술, 인터넷 등 ‘보다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시도들은 이미 시작되었고, 더 노력해야겠지만, 시민들의 행동을 가로막는 다양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²³ 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1/nov/07/few-willing-to-change-lifestyle-climate-survey 참고.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개인의 ‘작은 실천’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한재각 |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도 많은 ‘개인들’의 관심과 결의가 없으면 도전조차 하기 힘들겠지요. 기후위기를 느끼고 걱정하는 개개인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에서 기후정의운동은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 일상에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텀블러와 에코백을 이용해서 일회용 컵, 비닐봉지 등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은 찾아보면 너무 많고 널리 알려져 있으니 여기에서 하나하나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의 작은 실천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연결하려는 ‘관심과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기만족에 빠지거나 정부와 기업의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동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계와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혼자보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실천하는 모임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걱정하는 2명 이상의 주변 친구, 이웃, 동료와 함께 정기 모임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면서, 기후위기에 필요한 ‘중요한 실천’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나의 걱정과 관심, 개인적인 작은 실천이 사회적인 힘을 가진 운동으로 바뀌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기후행동이 시민의회 제안 등 지속적으로 의회정치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위기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한재각 | 청소년기후행동의 시민의회 제안은 ‘현재의 제도적 절차로는 절박하고 다급한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좌절과 비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현재의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작동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기후행동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제안한 ‘기후시민의회’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구성 및 운영되는 ‘기후시민의회’²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기존의 정치체제가 기후위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기후위기 최전선 공동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해결하고자 제시된 일종의 대안적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시민의회’만으로 작동되지 않는 기후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해볼 일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는 기존의 정치체제는 그대로 둔 채,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을 모아서 기후위기 해결책을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해보자는 일회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기존 체제의 한계를 보완한 기획이었으나,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적인 시민참여 이벤트를 통해 기존 정치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녹색연합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0%가 느끼는 정치권의 기후위기 인식도는 낮은 편이었는데요. 한재각 활동가님께서서는 국내 정치인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아쉬움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재각 | 국내 정치인들의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이해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지난해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대응 촉구 결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²⁴ 영국의 기후의회(CAUK)와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CCC).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점은 5개월 후에 ‘동일한’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또한 높은 지지율로 통과시킨 것에서 드러납니다.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일부 부산시민들의 개발 요구에 맞추고 표를 얻기 위해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대통령까지 가덕도 현지를 방문하고 국토부 장관의 부정적인 입장까지 억지로 돌려세웠죠.

당장의 선거정치를 위해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항공교통을 더 촉발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정치인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 환경과 기후문제에 가장 이해가 높다는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는 정치 사회적 압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강력해지면 그들은 기후정치 앞에서 똑똑해지지만, 운동이 느슨해지면 다시 멍청해집니다. 다른 말로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정치인들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강력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떨어지고 정권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하게 만들어야 똑똑해질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기후위기 해결을 최우선으로 약속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키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대기업,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부를 축적했는데요. ‘그들이 가져간 부’를 ‘그들이 초래한 기후위기’ 극복에 들어가는 재원으로 환수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한재각 | 강연에서도 언급했지만, 많은 대기업,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죠. 그러나 그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생긴 기후위기의 피해와 그 희생자들에게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기업들이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만들면서 기후위기 피해를 야기한 기업들이 기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후위기의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법률을 만들고,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2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I발제 2. 기후위기 시대 주거권의 긴급한 요구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포럼 일자 :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10월의 첫 번째 월요일은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지난 10월 4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이하여 무주택자, 세입자분들이 시청에 모여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점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을 통해 주택이 공급될 때마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소수의 부동산 권력이 독점하는 문제를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비리 문제를 고발할 게 아니라 주택 공급과 함께 반복됐던 개발이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집 갖기' 경쟁에서 마지막으로 탈락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감내하고 살아가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재난과 기후위기의 시대, 주거빈곤의 상황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이 강해지는 기후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중된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주거빈곤층이 겪는 실제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강연의 사례들은 최예륜 선생님의 연구보고서 「에너지 빈곤의 현실과 에너지 복지 현황」에서 가져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주거빈곤층의 첫 번째 사례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도 그 집에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의 첫 번째 안전수칙도 '최대한 집에서 머물라'는 자가격리 지침이었습니다. 여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름 혹은 겨울 혹서기에 받는 재난문자도 ‘최대한 집에 머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집의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안전수칙은 주거빈곤층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고시원인데, 단지 고시원 건물 밖을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안전이 보장될까요? 밖을 나가지 않으면 당장 생업 활동이 어려운 데다가, 안에 있더라도 타인과의 거리가 2m가 채 되지 않는 환경에 머물러야 합니다. 수십 명이 하나의 화장실, 공동 부엌을 사용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자가격리 지침을 이행할 수조차 없는 거죠.

이렇듯 코로나 19 라는 재난 상황은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전조는 이전부터 존재했죠. <그림 16>에서 ‘실내 및 실외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주로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이 실내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6> (위부터)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발생 추이, 실내 및 실외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장예진 기자 / 20210809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출처: 질병관리청(2021),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실내 및 실외 온열질환자(2021) 현황」 ;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www.yna.co.kr/view/AKR20210809038200530

실내에서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입니다. ‘집다운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라’는 지침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 2년 전의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화재로 사망했던 7명 중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고, 3명이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저렴하고 안전하지 않은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인데도 개선은 여전히 미비하기만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열악한 집에 머무를 수 없어서 집 밖을 전전하는 것입니다. 집 밖을 전전한다 해도 대안은 없고, 갈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공공시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인해 공용시설 휴관, 서울역 의자를 폐쇄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공공공간이 문을 닫으면 가장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공간이 아니면 머물 곳이 없는 ‘거리 홈리스’입니다.

최근 뉴스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에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이 많이 머문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고, 밤새 불도 켜져 있고, CCTV도 있기 때문에 집을 나온 청소년이 밤에 머무르다가 간다고 합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가출 청소년이 24시간 무인 편의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서울역과 같은 공공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과연 무인 편의점을 찾았을까요? 어쩌면 가출 청소년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무인 편의점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수리의 효과나 방도가 없는 집들의 상황입니다. <그림 17>은 2018년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단열 시공을 진행한 쪽방의 사진입니다.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림 17〉 오현웅 님의 방²⁵



쪽방에 살고 있는 오현웅 님에게 창호와 두 쪽 벽면을 단열 시공한 효과를 묻자, 가장 먼저 “벽 두께 때문에 방이 좁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벽 두께가 사방으로 8cm씩 두꺼워지면서 두 평 가까이 되는 쪽방의 넓이는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단열 효과는 높아져서 겨울철 추위는 덜 하지만 여름철 더위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러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체온을 비교해 보니 1도가량 올라가 있었죠.

만약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주택자라면 주택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제한적이어서 효과가 미미합니다. 창문형 에어컨 설치사업과 같은 지원사업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제하거나 그해의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다는 사유로 희망 신청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거환경의 수리 효과나 방도가 없는 사람들은 열악한 집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²⁵ 최예륜(2020), p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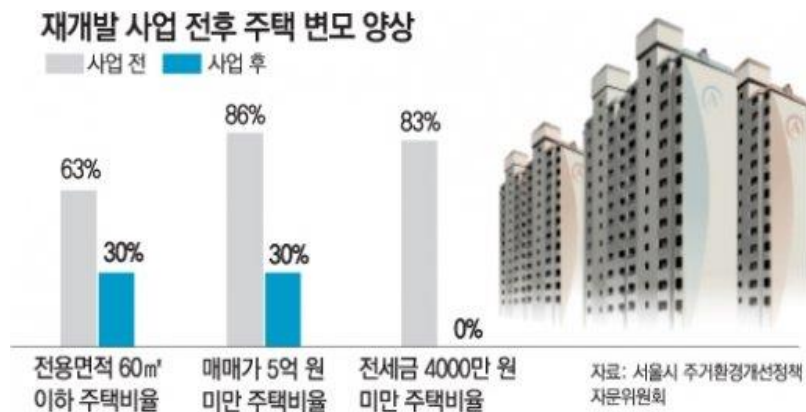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사례는 광열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집에 전열기구나 에어컨 등이 있더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않거나, 집이 옥탑이라면 보일러를 틀어도 겨울철 외풍이 너무 심해서 큰 효과가 없는 거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로 ‘에너지 바우처’가 있지만, 지원 대상을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 열악한 주거환경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해결할 방도를 제대로 논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저는 기후위기 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겹치면 혼란에 빠집니다. 과연 기후위기가 문제인지, 집이 문제인지, 아니면 가난 그 자체가 문제인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후위기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떠한 문제 해결의 물꼬도 틀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집’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집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본래 도시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목표는 원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려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 18>에서 ‘재개발 사업 전후 주택 변모 양상’을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비율은 63%에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림 18> 재개발 사업 전후 주택 변모 양상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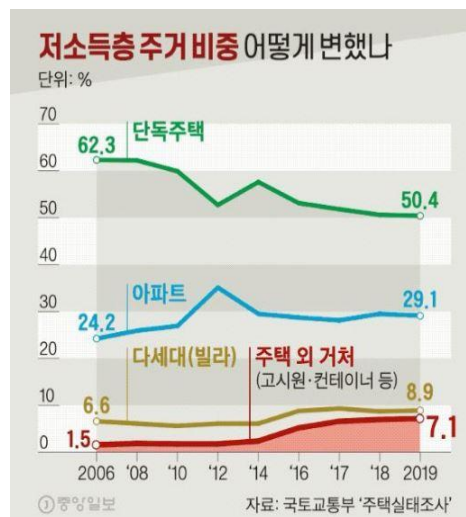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2009),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

매매가 5억 원 미만 주택 비율은 86%에서 30%로, 전세금 4,000만 원 미만 주택 비율은 83%에서 0%가 되었죠. 다시 말해 재개발이 끝나면 4,000만 원의 전셋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동네에서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이윤을 중심으로 한 주택 건설은 그 주택을 소유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시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주택정책에서 건설은 성공했지만 분배에 실패한 결과가 바로 ‘주택 품질의 양극화’입니다. <그림 19>에서 저소득층 주거 비중을 보면 단독주택이 줄어들었고, 아파트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거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사라진 것이죠.

<그림 19> 저소득층 주거 비중 어떻게 변했나



(출처: 국토교통부(2019), 「주거실태조사」;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때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재개발을 위해 쪽방·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가 모두 철거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개인을 넘어서 ‘기후위기 주체’로서 연대하기

우리는 승자 독식의 부동산 사회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기후정의를 함께 고민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책 <기후정의선언 2021>을 보면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토론은 기후위기가 약자에게 더 위험할 것이라라는 결과론에만 치중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야기한 ‘원인으로서의 불평등’을 간과해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²⁶ 결국 기후위기의 원인인 ‘불평등’, 불평등의 원인인 ‘사회구조’에서 출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2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사례는 동자동 쪽방촌에 만들어졌던 돌다릿골 빨래터입니다. 서울시에서 ‘2018 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공용 빨래터를 설치했죠. 그런데 돌다릿골 빨래터의 세탁기는 얼마 되지 않아 운영을 멈췄습니다. 노후한 쪽방 건물에 설치된 대형 세탁기가 작동할 때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쪽방은 그대로 두고 1 층에 빨래터만 리모델링한 결과였죠.

저는 이 돌다릿골 빨래터야말로 ‘근시안적인 대안으로는 쉽게 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과제를 몇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0 월 25 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하며,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²⁶ 기후정의포럼(2021), 「기후정의선언 2021 - 기후 정의 체제 전환」, 한티재, pp. 27.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턱 줄이기”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에 시민들의 ‘진짜 참여’가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노점상에게 단순히 플라스틱 줄이기를 강조하기보다 봄·가을이면 장사할 맛이 났는데 왜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지를 질문하고 구조적인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봄·가을이 길었는데, 기후위기 때문에 봄·가을이 짧아졌고 장사가 잘되는 기간이 줄어든 것처럼 ‘누구나 기후위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이해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내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한 언어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직접 해결하는 주체로서 그 언어를 찾고 이 사회에 개인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껏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개인적 실천’을 꼽았다면, 이제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실천’을 함께 요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더불어 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빈곤층도 기후위기를 자신의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싸워나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 장을 확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재 실천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김윤영 활동가님의 답변

“국일고시원 사건은 이후에 고시원장만 처벌받았을 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참사의 주된 원인이었던 비적정 주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김윤영 | 비주택 거주민의 상황이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만으로 해결될 리는 만무합니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규제는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 ‘주거권’을 중심에 둔 대안이 필요합니다. 열악한 거처에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그곳에서도 현재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임대인의 의무와 세입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 좋은 공공의 대안이 존재해 열악한 거처로 사람들이 밀려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시작되면서 백신 패스 혜택이 백신 접종자에게 주어질 예정인데요. 백신을 맞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백신 미접종자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코로나19가 자기 증명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등의 차별을 불러온 것처럼, 현 시국과 관련하여 또 다른 차별 사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윤영 |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의 이용자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우선접종 대상이었습니다. 홈리스도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이었지만 백신 접종률은 아직 낮은 상황인데요, 백신을 맞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거나 ‘정보 부족’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홈리스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다른 시설의 1차 접종률은 87%였으나 거리 홈리스의 경우 29%에 불과했습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미접종한 이들의 사유는 단연 ‘집이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43%는 “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가 어려워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필요한 선결 조건도 결국 ‘집’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긴급주거대책은 어디까지 마련되어 있을까요?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윤영 | 현재 정부의 긴급주거대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나 탈가정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집합시설이 바이러스 시대에 무력하다는 것을 고려해 개별적 공간을 긴급주거대책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탈시설운동’이 그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월세 체납자나 거리 홈리스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신청 기준이 까다롭고 6개월 이상 거리에서 생활한 이들을 제외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을 ‘지원 사유’로 인정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이들이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집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특정 계층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떠안기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한데요. 전환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의 필요성은 커지는데, 이러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우선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김윤영 | 무엇보다 염려해야 할 것은 위기 앞에서 약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의 압력입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니다. 약자의 생명과 존엄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기 위한 당면 과제는 아플 때 설 수 있는 노동권, 누구나 설 곳이 있는 주거권을 비롯해 모든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가족에게 떠넘겨진 돌봄의 역할을 사회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윤과 효율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과정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하나하나 이루기 힘든 일이겠지요. 그래도 코로나19를 통해 준비된 사회 안전망이 사회의 백신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운 만큼, 계속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정부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해야 할 정책은 무엇일까요?”

김윤영 | 집은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담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미래의 노후 수단으로 여겨왔습니다. 집을 소유해야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방향을 잡고, 이윤을 중심으로 굴러온 주거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부에 첫 번째로 요구할 사항은 공공주택의 대폭적인 확대입니다. 현재 한국의 전체 주택시장 중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소득자나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주거를 획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공평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에서 훨씬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세입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것이 중요한 ‘첫 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2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발제 3. 폭풍의 맨 앞에서 있는 사람들 : 농업과 먹거리, 그리고 농민

김정열 / 비아캠페시나 동남동아시아 대표

(포럼 일자 :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비아캠페시나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1993년 설립된 국제농민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81개국 182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은 2004년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성 농민으로서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기후위기의 폭풍을 맞은 농민들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가을 더위', '가을 한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21년 10월, 영상 30도까지 올랐던 기온이 18~19일, 양일에 걸쳐 영하 1도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심하게 떨어지는 현상은 한국에서 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을 추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리가 내렸고, 모든 작물이 얼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뉴스에 나온 양상추 품귀 현상입니다.²⁷ 양상추는 날씨와 기온에 취약한데 이상 한파 때문에 작황이 나빠지면서 주로 강원도 횡성 농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맥도날드, 버거킹 등은 햄버거에서 양상추를 빼거나 정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이를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상추의 작황이 우리의 식탁과 연

²⁷ biz.chosun.com/distribution/food/2021/11/03/UOVEB2F5XRGXJGNTLPCUZL457I 참고.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결되는 지점을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양상추 농가의 미래를 짐작하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친 농가는 과연 무엇을 수확하고, 무엇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림 20〉 (왼쪽부터) 2021년 10월 17일, 10월 19일의 생강밭 모습



(출처: 발표자 제공)

〈그림 20〉의 왼쪽 사진은 제 생강밭입니다. 10월 17일에 타 단체에서 제가 하고 있는 농생태학을 참고할 겸 밭을 보러 와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비교하기 쉬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10월 19일의 밭 모습입니다. 이상 한파 때문에 서리가 내려서 생강이 전부 말라버린 거죠.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림 21〉 (왼쪽부터) ‘깨씨무늬병’에 걸린 벼와 정상적인 벼의 모습



(출처: 발표자 제공)

올해 기후는 특히 고온다습했습니다. 8월 중순 이후 비가 계속 내리면서 병충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제가 키우는 논은 벼도 이삭이 하얗게 말라버렸습니다. 주변 지인인 제천 농민의 논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림 21〉을 보면 왼쪽이 ‘깨씨무늬병’²⁸에 걸린 벼이고, 오른쪽이 정상적인 벼입니다.

고온다습으로 인해 ‘배추 무름병’이 확산되면서 배추 농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다들 김장을 준비하실 텐데, 김장철 배추 수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저 또한 농사지은 지 30년 만에 김장 배추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니깐요. 더구나 배추 무름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올해는 폐농하고 내년을 기약한다고 해도 토양에 바이러스가 계속 남아 있으면 내년에도 배추를 심지 못하는 겁니다.

²⁸ 식물의 잎에 병원균의 감염으로 갈색 반점이 형성되는 병.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의 또 다른 이름, 식량위기

기후변화는 식량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1%이고, 식량수입량은 세계에서 5 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식량지수는 10 여 년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기후재난으로 인해 가뭄이 심화되면서 식량 생산에 문제가 생겼고, 이 식량위기는 결국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의 몫으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가을배추를 100% 폐기해도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관련된 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의 1/100 도 보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후위기를 위해 농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농지에 태양광이 들어서는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기후위기를 야기하는데 농업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봐야 할 것은 모든 농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거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배출량의 34%를 차지하는데요. 이 먹거리 부문의 배출량은 농업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 농업의 전 과정을 다 포함합니다. 이때의 농업 생산은 결국 대규모 생산,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에 의한 생산입니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Bayer-Monsanto(바이엘-몬산토), Cargill(카길), Nestlé(네슬레)와 같은 기업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입니다. 2018년에 Bayer 과 Monsanto 가 통합되어, 전 세계 종자의 50%를 Bayer- Monsanto 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rgill 은 전 세계 곡물유통의 40%를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글로벌 푸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차리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생산되었고, 누가 생산한 것인지 이 3 가지를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 3 가지를 기억하고 유념한다면 먹거리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34%를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이 가지고 온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힘 또한 농업에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토양과 그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토양을 관리하는 농민에게 그 ‘힘’이 있죠. 토양은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를 격리하고 흡수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지구의 생태적인 복원력을 높이는 일을 농업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비아캄페시나의 구호에는 “소농이 지구를 지킨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후위기를 완화시키는 주체가 농민임을 알아야 합니다. 농민이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농생태학입니다. <그림 22>는 전여농의 ‘언니네텃밭’ 생산자들이 농생태학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키우고 있는 사진입니다. 소농의 농생태학적인 생산으로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22> 시동공동체 언니네텃밭 생산자의 밭



(출처: 발표자 제공)

두 번째는 토종씨앗입니다. 상주 지역에서 저를 비롯한 농민들은 어르신들이 키우고 있던 토종씨앗을 이어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74세가 된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키우던 참깨 씨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앗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최소 7~80년, 어쩌면 100년 이상 됐을지도 모를 토종씨앗을 이어받고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토종씨앗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씨앗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져가는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환경적 측면과 먹거리 측면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23〉 참깨 토종씨앗



(출처: 발표자 제공)

1996년에 비아캄페시나가 식량주권을 최초로 제안했고, 올해 25주년이 된 기념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식량주권은 땅이고, 물이고, 종자이고 빵이며 그리고 연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거리를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주체로 농업과 농민이,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시민들이 될 수 있습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김정열 대표님의 답변

“탄소중립에 있어서 타 선진국들은 농식품 분야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과 예산을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2.8%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간극 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김정열 | 현장 농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의 피해, 그로 인한 농민들의 처지 등에 대한 현장 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과의 정책협의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회성이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정책협의 파트너로 설정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먹거리 시스템을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보고, 농업과 먹거리를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민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농민들이 배제되는 등 농민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했는데요. 생계가 날씨가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요?”

김정열 | 사회적, 국가 차원의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민간보험으로 일부 보상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물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농가에서 감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개별 농민이 져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에 대한 농민교육과 정보 제공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농촌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한데요. 기후위기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체로서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농촌 유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정열 | 관심 있는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왔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청년들이 살 만한 집이 농촌에 없고, 청년들이 농사지를 토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농촌의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업 생산을 통해 적절한 수입을 얻지 못하면 청년들이 농촌에 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농산물의 적절한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 그 가격이 시장에서 보장받지 못했을 때 이를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같은 보완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경농업, AI 로봇 농업 도입 등 새로운 농업이 등장했는데요. 과연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지,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지 궁금합니다.”

김정열 | 현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농업 대책으로 스마트팜, 디지털농업 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올바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스마트팜은 수경재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화학비료가 들어간 양액을 공급하여 작물을 키워내는 거죠. 화학물질로 작물을 생산하며 ‘흙’이 존재하지 않는 농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반 농민들이 시도하기에는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농민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며, 설령 비용을 부담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초기 비용을 상쇄할 정도로 경제적 수익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의 한국 농업 구조 속에서 스마트팜, 디지털농업과 같은 농업은 소위 기업적 농업의 일부이자 기업만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 시대에 놓인 농업의 ‘직업적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열 | 제가 농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후위기가 고조될수록 ‘농민’이야말로 기후위기 완화에 기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비록 적은 숫자이고, 이 사회에 농민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만 자신의 먹거리, 그리고 이웃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농민의 위치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2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발제 4.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시민사회의 자세

정규석 / 녹색연합 사무처장

(포럼 일자 :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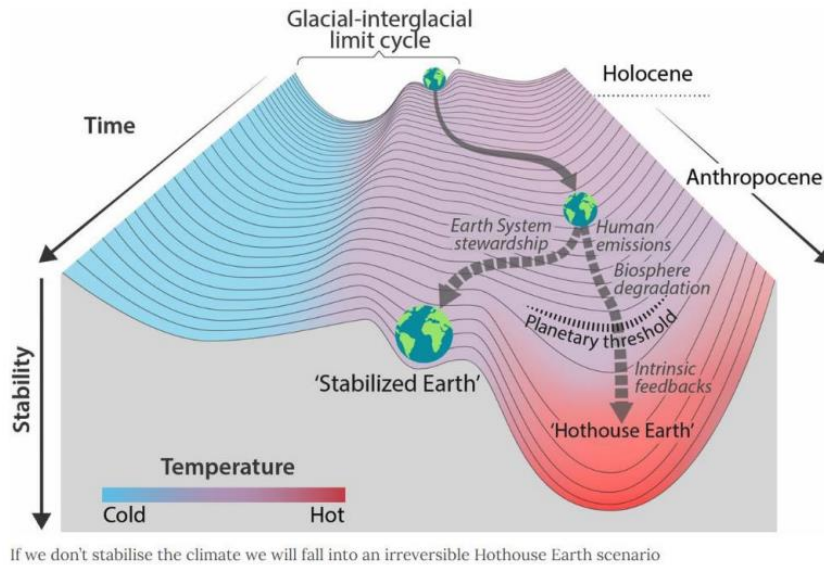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과연 기후위기가 맞을까요?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 KINDS)'에서 최근 3년간 기후위기 혹은 기후변화를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2018년에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기후위기'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영국에서는 호주의 산불, 시베리아의 폭염, 동토의 해빙 등 이전에 없던 자연의 요동을 경험하면서 '멸종저항'이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는 한국에 퍼져서 '멸종저항 서울', '멸종저항 한국'과 같은 강한 액션을 동반한 활동을 만들어 냈죠. 작년 9월 24일, 한국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국회도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 상황'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번 포럼 강연을 준비하면서 서울시 NPO 지원센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s) 이론과 뜨거운 지구(Hothouse Earth) 효과에 따르면 우리는 명백하게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곡점이 생기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수십억 명의 인구가 이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림 24〉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s) 이론과 뜨거운 지구(Hothouse Earth) 효과



(출처: © PNAS)

탈성장,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은 다른 강연에서 충분히 다뤄졌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기후위기 속에서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NPO, NGO,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

먼저 NPO 는 무엇일까요? 서울시 NPO 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정의된 내용을 보면,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시민들과 함께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를 뜻합니다. 서울시 NPO 지원센터의 비전은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연결과 협력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공익활동에 대한 지지와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의 견고한 관계에 기반하여, 사회문제 해결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NGO는 NPO에 속한 하위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NGO는 NPO 중에서 인권·환경·여성·소비자운동과 같은 정치개혁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쨌든 NPO나 NGO 모두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림 25>의 스펙트럼에서 왼쪽을 ‘기존 체제의 유지’로, 오른쪽을 ‘새로운 체제로 변화’로 본다면 NPO, NGO, 그리고 시민사회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당연히 오른쪽에 치우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림 25> 스펙트럼을 통해 보여주는 정부 정책에 대한 NPO의 자세



(출처: 발표자 제공)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명칭은 물론, 법안 주요 내용에 녹색성장이 포함되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회구조도 바꾸지 않고,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수준도 미흡한 수준으로 결국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에 대해 기후환경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죠. 헌법소원의 주최로 기후위기비상행동, 시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단체 일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그 얘기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바라는데, 현재 나온 법안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 되는 거죠. 아까 스펙트럼 예시에서 말한 것처럼, NGO와 시민사회는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안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나마 이거라도’라고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NPO, NGO, 그리고 시민사회는 가장 강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죠.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구 체계의 해로움을 가진 그룹들, 기존의 산업계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장애물 앞에서 주저하면 정부 정책을 선도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위기에 숨겨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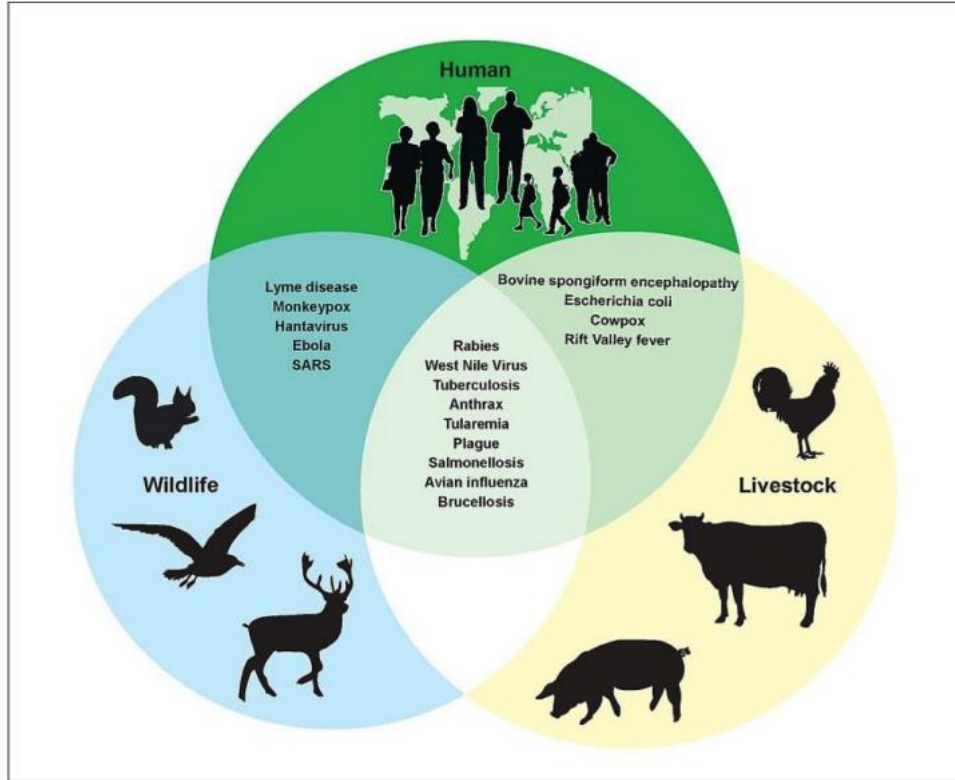
한편 기후위기 말고도 인류가 처한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기후운동가들은 종종 기후위기로 인해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가 인류가 직면한 위기 중 하나이며 매우 시급한 위기인 것은 맞지만,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생물다양성의 위기죠.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기후위기는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 따르면, 2000년부터 매년 약 650만ha의 산림이 사라졌고, 지구상 전체 생물 종의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협 요인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도시화 등 인간의 토지 이용 변화와 그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이고, 두 번째는 식물 채집과 사냥입니다. 이때의 사냥은 원시시대의 수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식을 위한 동물 생산, 커피, 담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토지를 이용한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이 파괴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게 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림 26〉 인수공통감염병 및 그 영향을 받는 인구의 예시

(Examples of Zoonotic Diseases and Their Affected Populations)



(출처: GAO analysis of USGS data (data); pp. 12-55)

이러한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해 2010년에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서 20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치 목표(Aichi Target)’로, 2050년까지 더 이상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숲을 포함한 자연 서식지의 손실 비율을 최소한 절반 이상 저감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15%까지 복원하고, 국토 대비 육상보호지역은 17% 이상, 해상보호지역은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담겨 있죠.

그런데 2020년 9월에 UN이 아이치 목표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개 목표 중 완전히 달성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1970년에 비해 야생생물의 개체 수는 현재 33%만 남았으며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죠. 과학자들은 약 6,6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지금의 인류가 한 번도 직면하지 못한 대멸종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우리는 명백하게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걸까요?

방향이 없는 변화는 무의미하다

우리는 자꾸 빠르게만 가려고 합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낸 값이고,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뿐만 아니라 운동 방향까지 갖고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속력만 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구 16,000 명이 살고 있는 경상북도 영양군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마을에 우리나라 풍력발전 에너지의 15%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풍력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하고 있죠. 서울에 지으면 안 되는 걸까요? 서울은 아파트에 가정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조차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워서 기피합니다. 태양광 시설이 아파트 미관을 해쳐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입니다. 방향 없이 속력만 중시하는 거죠. 속도가 아닌 속력만 중시하는 상황은 다시 환경 수용성과 주민 수용성, 그리고 원인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두 가지입니다. 스펙트럼의 가장 오른쪽의 이야기, '새로운 체제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합니다. 또한 속력이 아닌 속도를 중시해야 합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을 유지하면 우리는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을 혹사한 대가로 인류 멸망의 전조에 들어섰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인간의 편리 대신 불편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탈성장입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정규석 사무처장님의 답변

“기후위기 유발에 책임이 큰 업종, 기업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 정책 마련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실제로 그렇게 시행한 기업 사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석 |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몇몇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공언하고, RE100²⁹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행방안이 부족합니다. 마치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수사적 선언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하면 진정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선거 의제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인들 역시 다양한 기후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공약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정규석 | 우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부응하는 정책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 가능한 정책 이행계획이 수반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정책 공약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유지를 이야기하거나 신규 공항 건설을 담고 있는 개발 공약 등이 한 명의 후보 정책 공약에서 공존한다면 그야말로 거짓입니다.

²⁹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캠페인. 2014년 비영리 환경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가 연합하여 개최한 Climate Week NYC에서 처음 발족되었다.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에서도 정책의 속도 합의가 시급할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합의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정규석 | 제 생각이 짧아서 가장 핵심적으로 합의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가해’와 ‘피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그 관계’를 명확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선도하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현재 한국의 정치는 그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도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깨어 있는 시민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역할을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시민사회, NPO, NGO가 그 역할을 하면서 선도해야 할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메시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산림청은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 수정 합의안을 발표했는데요. 대규모 별채에 관한 기존 계획이 수정된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석 | 산림은 탄소흡수 기능만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생태계 전반의 토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산림인데, 산림청의 관련 정책은 산림을 탄소흡수원으로만 취급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규모 별채도 위와 같이 산림을 협소한 가치로 규정해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별채 방법에 대한 고민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몬트리올 프로토콜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별채와 산림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 따른다면 현재 진행되는 산림 관련 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산

[NPO 정보지식포럼 2차]

기후위기,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림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국제 기후단체들로부터 ‘기후 악당’ 국가로 규정될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 관계,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강연 끝에도 말씀하셨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을 위해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규석 |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유럽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미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관세’라는 개념도 이런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적 협력 관계 등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관성에서 벗어나서 세계사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실재하는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위기 상황을 인식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등 민간이 조응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단추는 정부의 몫입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3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불평등'

|발제 1.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을 말해야 하는 이유

박권일 / 사회비평가

(포럼 일자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공정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말 ‘공정 (fairness)’은 도대체 어떤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참지 못하는 사회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라고 말합니다. 오찬호 사회학자의 책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³⁰에서 “지금 대학생들은 수능 점수의 차이를 모든 능력의 차이로 확장하는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 “‘높은’ 곳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을 멸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낮은’ 곳에 있는 학생들을 멸시하는 편을 택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정성 담론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성, 능력주의 담론에서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의 차이로 문제를 프레이밍 하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인의 분배적 정의관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가치관을 논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성취했을 뿐 아니라, 부패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정도로 정의로운 시민들이, 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집단행동에는 잘 나서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국인은 ‘불공정’은 죽어도 못 참지만, ‘불평등’은 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룰

³⁰ 오찬호(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20대의 자화상」, 개마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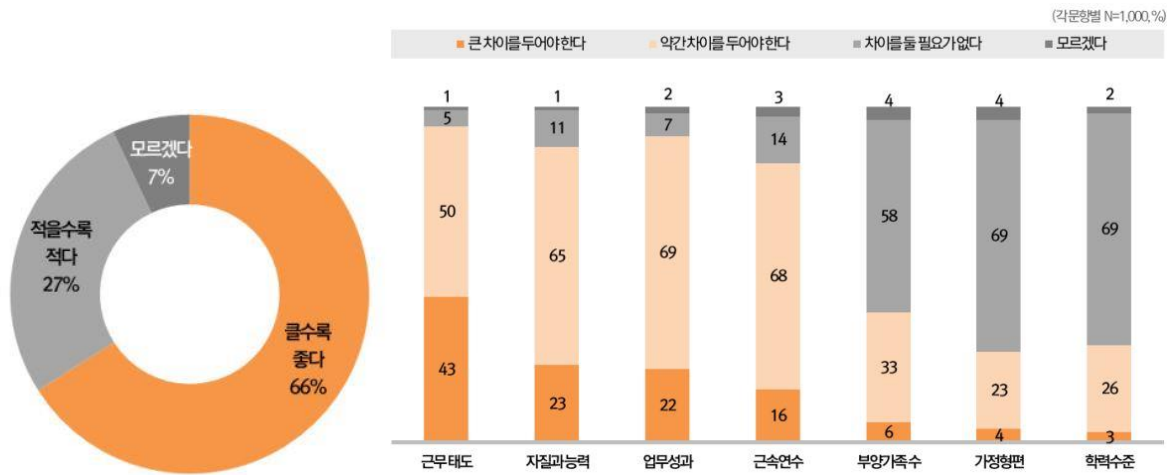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이 잘못된 ‘불공정’은 못 참아도, 룰이 공정하게 적용된 ‘불평등’은 기꺼이 참는다는 거죠. 신광영 교수는 “경제적 차원의 변화가 곧바로 정치적 차원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³¹ 결국 공정성이나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한국 사회는 놀랍게도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불평등을 선호하는 국가’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주의에 경도된 사회’ 중 하나입니다. <그림 27>을 보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입장이 66%입니다.

<그림 27> 능력/노력별 보수 차이, 임금 차이를 두어야 할 조건에 대한 생각



(출처: 정한울·이관후(2018),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 보고서」, 『여론 속의 여론』)

대다수가 분배에 있어 산술적 평등보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자질과 능력,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무태도와 같은 노

³¹ 신광영(2016), 「한국사회 불평등과 민주주의」,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pp. 73-95.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력 요인에 대한 보상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세계가치관조사: 한국인의 남다른 가치관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학자 로널드 잉글하트, 크리스천 웰젤의 ‘세계가치관조사’³²를 살펴봤습니다. 세계가치관조사는 산업화, 경제성장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가치관도 체계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근대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적 풍요에서 삶의 질로 옮겨가는 많은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을 밝혀내고, 이를 “조용한 혁명(The Silent Revolution)”으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경제결정론, 제도 환원론에서 벗어나서 대중의 가치관이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결정적 매개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가치관조사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수많은 설문 문항들로 설계된 조사인데요. 네 가지 핵심 가치는 바로 전통적 가치와 세속 합리적 가치, 생존적 가치와 자기표현 가치입니다. 이 가치들은 각각 두 쌍씩 Trade-off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가치가 커지면 한 가치가 줄어듭니다.

전통적 가치가 종교, 가족, 전통적 권위를 존중한다면, 세속 합리적 가치는 종교나 가족보다 과학과 기술에 권위를 부여하고 표준화된 삶을 선호하는 자본주의적인 합리성을 의미합니다. 생존적 가치는 경제성장, 안정, 치안을 중시하는 물질적 가치로 소위 먹고사는 문제를 중시하고, 자기표현 가치는 경제성장을 넘어서서 생태환경에 관한 관심, 소수자와 약자에 관용적인 가치를 중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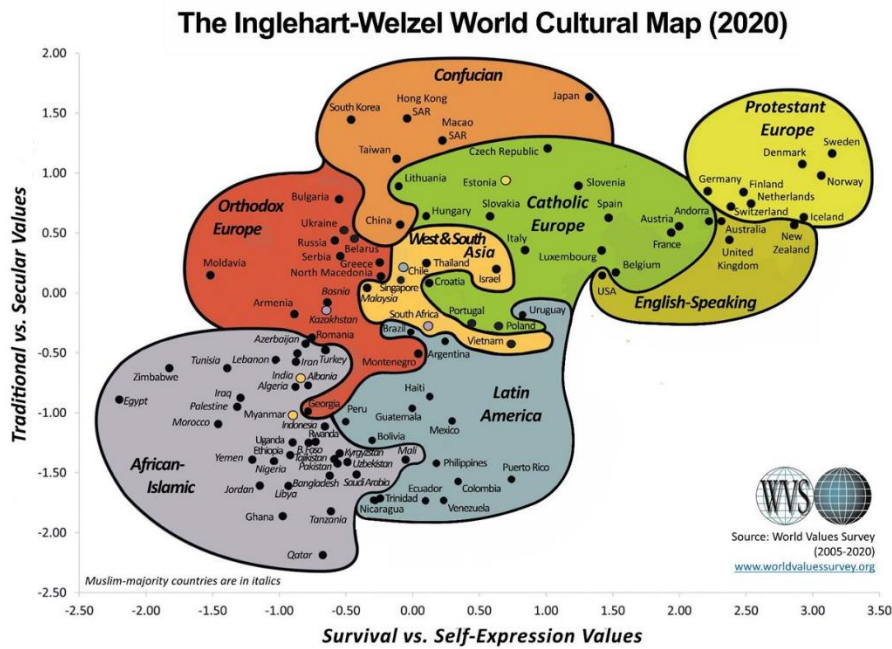
이 4 대 가치 중 핵심은 자기표현 가치로,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전면화되었습니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적인 위협이 감소하면서 인간의 관심사는 생존보다 더 추상적이고 성찰적인 의제로 넘어갔습니다. 인간은 친족·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유대와 관용, 타자에

³² 1981년부터 40년 넘게 진행한 세계 100여개국 학자들의 협력 프로젝트. 4~6년에 한 번씩 조사하며 지금까지 약 7차례 완료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대한 신뢰, 인류 전체의 문제에 대한 관심 등 거창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림 28〉 The Inglehart–Welzel World Cultural Map(2020)



(출처: Ronald Inglehart; Chris Welzel(2020), 「World values survey」, www.worldvaluessurvey.org)

4대 가치는 경제성장에 따라 전통적 가치는 세속합리적 가치로, 생존적 가치는 자기표현적 가치로 이동하는 체계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림 28〉은 최근 세계가치관조사를 바탕으로 그린 세계문화지도인데요. 그래프에서 가로축(X축)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자기표현 가치가 높은 것이고, 왼쪽에 위치할수록 생존적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세로축(Y축) 상단에 위치할수록 세속합리적 가치가 높은 것이고, 하단에 위치할수록 전통적 가치가 높은 것이죠. 우측 최상단에는 소위 선진국에 속하는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위치해 있고, 자기표현 가치와 세속합리적 가치가 높은 경향을 보여줍니다. 좌측 하단에는 전통적 가치와 생존적 가치가 강하게 나타나는 개발도상국들이 쏠려 있죠.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한국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세로축(Y축)을 보면 유럽을 능가할 정도로 세속합리적 가치가 높는데, 가로축(X축)을 보면 경제 수준에 비해 자기표현 가치가 낮고, 생존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특성은 경제성장과 안보에 집착하면서 사회적 신뢰와 소수자, 이방인에 대한 관용이 지나치게 적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보통 잘살게 되면 사회가 관대해지는데, 한국 사회는 경제 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 사회적 신뢰나 관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러한 특징을 ‘강한 물질주의’와 ‘약한 탈물질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1981년 조사 이후 거의 40년 동안 한국의 특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치관조사에 항상 포함되는 질문 중 하나가 ‘소득 평등(income equality)’에 관한 문항인데 요. 예컨대 ‘소득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노력 등에 따라 더 차이가 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에서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소득 불평등에 ‘압도적 찬성’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6차 세계가치관조사(2010~2014)에서 중국은 평등에 찬성(52.7%), 불평등에 찬성(25.8%)으로 ‘평등에 찬성’이 2배 이상 높았고, 일본은 평등에 찬성(28.6%), 불평등에 찬성(25.1%)으로 비슷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한편 능력주의 나라인 미국은 평등에 찬성(29.6%), 불평등에 찬성(36.2%)이었지만, 수치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평등에 찬성(23.5%), 불평등에 찬성(58.7%)으로 압도적으로 불평등을 선호했으며, 7차 세계가치관조사(2020)에서는 더욱더 극단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³³

결국 한국인의 가치관은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분배’를 극단적으로 선호하고, 평등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태위기에 굉장히 무관심하고, 순위에 집착하고, 공공선에 대해 냉소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사회죠. 가치의 위계서열이 굉장히 명확하며, 모두가 서울대와 강남 아파트를 열망하면서 뛰어가는 ‘소용돌이 사회’라고도 불립니다. 모두가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높은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맹렬히 달려가며, 그 과정에서 대다수가 탈락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³³ 평등에 찬성(12.4%), 불평등에 찬성(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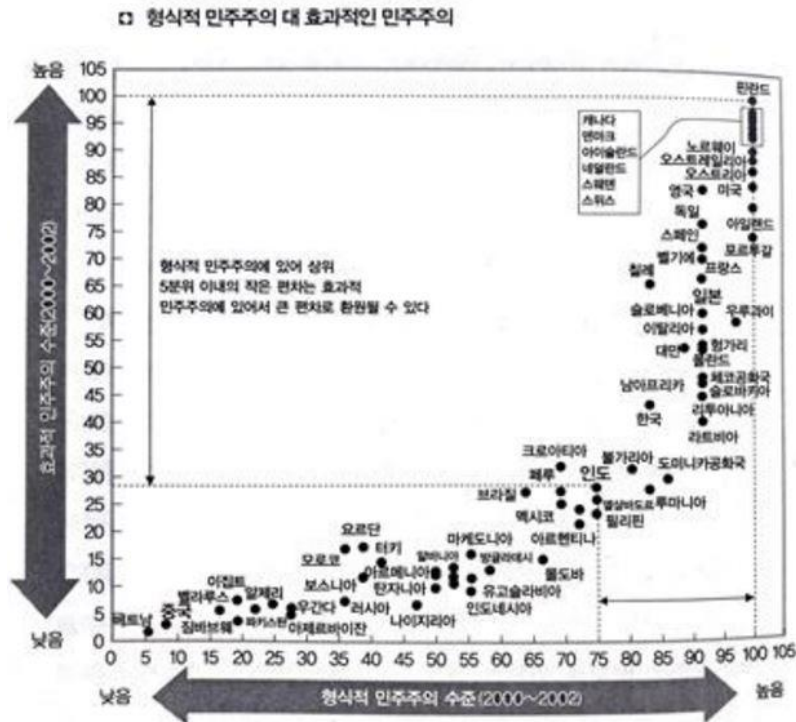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따라서 대안적인 삶의 모델 자체가 제시되기 어렵고, 역동적이지만 경제 압력 또한 극단적으로 높은 사회, ‘다이내믹 코리아’인 거죠. 이 모든 특성이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유독 낮은 자기표현 가치라는 지표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자기표현 가치는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른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도 한국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기표현 가치 수준은 형식적 민주주의 사회와 효과적 민주주의 사회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데요. 형식적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민주주의이고, 효과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제도로 존재할 뿐 아니라 개인이 실제로 평등하게 존중받는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림 29〉를 보면, 북유럽, 서유럽 국가가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효과적 민주주의가 모두 높습니다.

〈그림 29〉 형식적 민주주의 대 효과적 민주주의



(출처: 로널드 잉글하트, 크리스찬 웰젤(2011),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 김영사)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반면 한국은 형식적 민주주의는 유럽과 비견될 정도로 높지만, 효과적 민주주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³⁴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 완전한 민주주의 23개국 중 최하위(2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15년 동안 시행한 조사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최하위 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최상위를 오가고 있죠.

이에 정치학자들은 “정치 문화의 면에서 다른 완전한 민주주의에 크게 뒤지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에 비해 민주주의 문화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³⁵ 자본주의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를 압도하는 사회에서 형식적 민주주의까지는 나아가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로 진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구체적인 평등’이 피어나는 사회를 위하여

많은 한국인은 불평등이 문제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불평등이 아니라 불공정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공정’ 담론을 야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1루에서 태어난 사람들(중산층)은 3루에서 태어난 사람들(상류층)을 보고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면서 야구 경기에 참여조차 못 하는 사람들은 배제하거나 “억울하면 노오력하라”고 멸시한다는 거죠. ‘과정의 공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결과가 지나치게 불평등하기 때문에, 결국 현존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부정의’로 귀결되고 맙니다. 문제는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등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치학자 해커&피어슨이 미국의 양극화가 심해진 원인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화-민주 양당 중심 체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듯이, 결국 문제는 정치에 있습니다. 한국도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비슷한 형태의 양극화 문제가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화된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고 보수 양당 경제정책과 정치 대표성 문제의 한계를 극

³⁴ EIU(2020), 「Democracy Index 2020」.

³⁵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정치학회보』, 47(3), pp. 25-43.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복할 수 있는 유력한 진보 정당이 출현해야 합니다.

특히 능력주의는 차별, 배제, 소유권 중심의 삶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며, 나아가 지구에서의 공존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때 고도성장주의의 강한 동기를 유발한 능력주의를 버리고, 불공정이 아닌 불평등 자체를 환기해서 시민적 관심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은 “사람들이 희소 재화와 공공재를 공평하게 분배받아야 한다”는 요지의 ‘구체적 평등주의(specific egalitarianism)’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국적 사례가 ‘국민의 69.7%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주요 공공 복지를 공평하게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전히 ‘불평등에 찬성’이 훨씬 높지만, 자신이 경험한 종류와 관련해서 ‘평등에 찬성’이 높다는 것을 희망의 단초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등이나 형평에 집착하기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어떻게 갈 것인지 불평등 문제를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박권일 사회비평가님의 답변

“강연에서 한국과 비슷한 사례의 국가로 ‘싱가포르’를 말씀하셨는데요. 한국과 싱가포르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자기표현 가치는 낮은’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권일 |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과 싱가포르의 역사적 경로를 보면, 오랜 권위주의 정권, 즉 정치적 독재가 존재했다는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물론 독재국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한국과 싱가포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대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기표현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강연에서 말씀하신 평등한 복지정책의 구체적 경험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박권일 | 복지의 경험이 확장되어야 구체적 평등주의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보수 양당 정치체제하에서는 복지 확대의 정치적 동기나 유인이 적기 때문에 복지 확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수 양당 정치체제를 균열시키고 진보적 정당이 강력한 현실정치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이 중요해진 시대에서 개인의 핵심 역량을 키우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것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강연을 듣고 나니 과연 이게 진정한 해법인지, 능력주의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결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국 이 또한 끊임없는 성장을 강요하고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이와 관련해서 박권일 사회비평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박권일 | 개인이 역량을 키워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각자도생’이겠지요. 그러한 각자도생 사회야말로 경쟁에서 처음부터 불리한 환경에 놓인 약자와 소수자에게 지옥 같은 세상일 것입니다. 반면 기득권 집단에게는 천국처럼 안락하겠지요. 이런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하고, 모두가 함께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능력에 따른 차별을 수용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소위 ‘불평등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의 경향을 바꾸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박권일 | 저도 최근 질문과 관련된 내용의 책³⁶을 굉장히 절망하면서 썼는데요. 데이터를 볼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능력주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논의하는 이런 자리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연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특권’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특권에는 민감하지만, 본인이 실제로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편이죠.

특히 한국 사회는 수능, 고시를 비롯한 각종 공채 시험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기득권과 자격증만 있어도 생기는 지대 추구적 특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일을 하고 노동 현장에서 숙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나 보상은 굉장히 낮죠. 예컨대 엔지니어나 블루칼

³⁶ 박권일(2021), 「한국의 능력주의 -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 이데아.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라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도 87~90년대 중반까지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블루칼라노동자가 일해서 중산층이 되기 어려운 사회이며, 오로지 인지 능력, 학습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통해 정규직이 되고 특권을 얻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다 같이 평등하고 행복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려면,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거둔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보상하는 체계를 정교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3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불평등'

|발제 2. 학력·학벌 차별 반대운동과 시민사회 연대하기 :

학력 칸을 넘어 자유와 무지의 세계로

윤서 / '투명가방꾼' 활동가

(포럼 일자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제가 활동하는 투명가방꾼의 정확한 명칭은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꾼'입니다. 투명가방꾼은 대학입시에 문제의식을 갖고 거부하는 행동으로 시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작년 수능날에 “우리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슬로건으로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림 30> 2018 대학입시거부선언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출처: 발표자 제공)

대학입시거부선언의 계기를 찾아서

저도 2018 년에 “멈춰서자.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했는데요. ‘불안한 삶 STOP’, ‘학력·학벌 차별 STOP’, ‘경쟁압박 STOP’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파이낸셜 빌딩 앞에서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2018 년에 작성했던 공동선언문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대학입시거부선언이 우리의 삶을 당장 바꾸는 것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닿고 새로운 고민과 상상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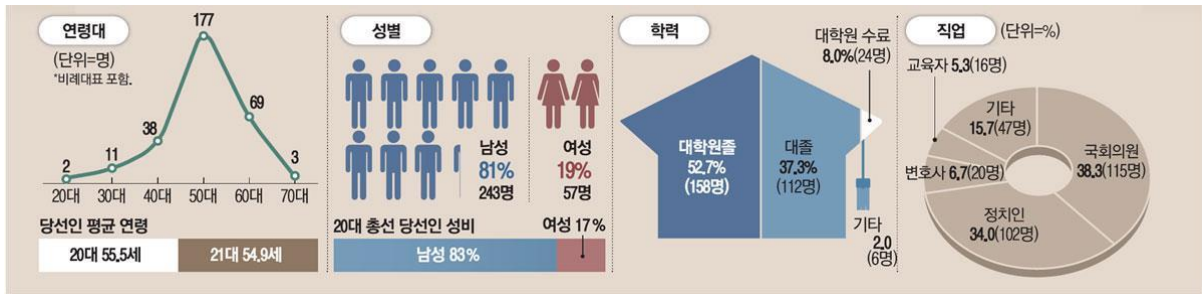
그런데 이렇게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하면 소위 악플이 달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부터 “그냥 네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듣죠. 물론 우리의 선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번 해볼 수 있는 데 까지 한다는 의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하게 된 사람들과 그 계기는 다양합니다. 고 3 수험생이 가장 많고, 대학교 자퇴생, 저와 같은 재수생 등이 있죠. 저는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거부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대체 어떤 공간인가요? 오직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수업을 하고 그 길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학교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갈 만한 학생 1%만을 위해 굴러가고, 나머지 학생 99%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거부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꼭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림 31>을 보면 21 대 총선에서 당선한 국회의원들의 연령대 과반수가 50 대이고, 남성이 80% 이상, 학력의 90%가 대졸 이상, 직업 중 직업정치인의 비율이 38.3%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그림 31〉 21대 총선 당선인 300명 분석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 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402186)

당선인뿐만 아니라 총선에 출마한 총 1,118 명의 후보자 중 대졸 이상 학력은 989 명이었고, SKY 출신은 103 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년 한겨레에 “국회에서 동창회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요.³⁷ 다양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도 당당하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렇듯 국회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소수만을 위한 소수의 목소리가 대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해진 학력 차별, 소외되는 청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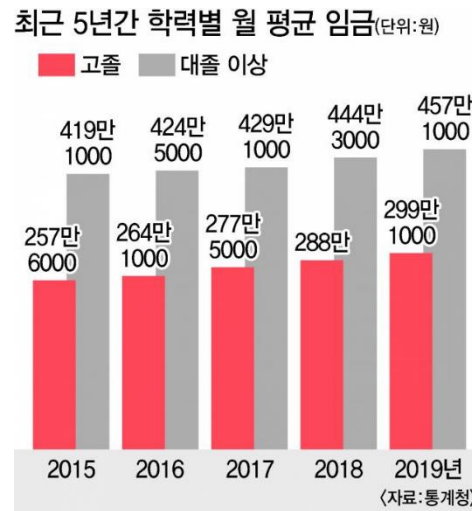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 또 어떤 불평등 문제가 있을까요? 교육부가 차별금지법 금지 대상에서 ‘학력 차별’을 빼자는 의견을 냈다가 철회한 일화가 있습니다. 학력 차별은 이미 사회에 너무 만연해서 차별로 인식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첫 번째로 익히 알려진 문제는 ‘학력이 곧 경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32〉에서 최근 5 년간 학력별 월 평균 임금을 보면 고졸과 대졸의 임금이 2 배 가

³⁷ www.hani.co.kr/arti/PRINT/936166.html 참고.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이 차이 납니다.

<그림 32> 최근 5년간 학력별 월 평균 임금



(출처: OECD(2019), 「Education at a Glance」(각 연도); e-나라지표, 「학력별 임금 격차」)

승진 체계 또한 달라서 고졸 직원은 대졸 직원보다 오래 일해야 승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노동과 역할을 수행한다면 학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을 받고 동일한 조건에서 승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주변 활동가의 사례를 예로 들면, 저학력자와 대졸자의 강의로 지급 기준이 달라서 강의를 적게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활동 경력이 풍부한 것과 별개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낮은 강의를 책정받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대졸자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사람들이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 중 하나는 일할 때 차별을 겪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일할 때의 차별을 넘어서서 일 자체에 진입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차별이 아닐까요? 이를테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대학에 준하는 곳에서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청소년지도사, 성폭력상담원, 군 장교 등의 자격증이나 직업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주변 동료들이 사회복지사나 성폭력상담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했지만 학력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격증은 자격에 대한 인증을 의미하는데, 그 자격을 인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격을 인증해야 하는 것 자체가 이중 요구이며 어떤 이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청년정책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청년정책은 학자금 대출,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은 무조건 대학생일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대학비진학자 청년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낮습니다. 청년정책의 대상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비진학자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체 청년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받았던 청년수당은 졸업 후 2년이 넘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청년인 저에게도 필요하고, 제가 필요하다면 모든 대학 비진학자 청년들도 필요할 것이기에 청년정책의 대상이 꼭 전체 청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길도 함께 간다면

활동을 하다 보면 학력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은 학력 평균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완전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학력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들을 낮춰야 합니다. 주변 활동가 중 한 분은 “내가 유일한 중졸이어서 속한 집단의 학력 평균을 크게 낮춘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는 단 하나의 학력만 있기보다 다양한 학력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한편으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모르고 낯설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같이 시도하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대안인 ‘함께하자’입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라폰젤>에서 주인공은 스스로 선택한 적 없는 성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금의 청소년들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학력 차별 역시 누군가는 스스로 학력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별당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고 합리적인 차별이란 그저 적나라한 차별을 포장하는 말일 뿐이고,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학력도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력이 언제부터 학력 차별의 이유가 되었나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적 없는 ‘학력’이라는 성에 갇혀서 내 인생이 언제 시작하는지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학력 차별 반대 운동’이라는 먼 길을 같이 시도하고 함께하면서 연대의 영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I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윤서 활동가님의 답변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할 때 저마다의 계기를 낭독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했던 내용과 2022년 올해에 대학입시거부선언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다른 지점이 있을까요?”

윤서 | 크게 다른 점은 못 찾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보자면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답지 못한 교육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과 사회가 그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자 학생들의 삶은 코로나 시국이건 입시제도가 어떻건 간에 비슷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2018년에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한 윤서 활동가님을 비롯해서 예전에 대입거부선언을 한 활동가들은 그 뒤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서 | 무척 다양합니다. 활동가로 살아가는 분도 있고, 창업을 한 분도 있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대학 전공을 따라서 먹고사는 것이 아니듯이, 거부선언을 해도 아예 관련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투명가방끈’ 외에 학력 차별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연대할 수 있는 활동이나 모임, 네트워크가 있을까요?”

윤서 | 학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투명가방끈 외에는 광주의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청년액션(출신학교차별금지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법청년액션’ 등이 생각납니다.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유에 학력 차별도 들어가 있는 만큼, 청년들이 차별금지법과 학력 차별을 연결 지어서 목소리 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력·학벌 사회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사회에 학력 차별 문제가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인데요. 강연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연대하고 더 많은 참여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윤서 |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일수록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대학에 갔을 것(혹은 갈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학번으로 나이 묻지 않기, 이력서에 학력 기재하지 않기 등 당연하게 상대방을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상정하거나, 대학에 갔다고 생각하거나,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을 어딘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 혹은 대단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대학 중심 사회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대졸과 고졸의 임금 차이는 어떤지, 대졸자인 나와 대졸자가 아닌 동료의 복지가 다르지는 않은지, 구인·구직 사이트에 왜 대졸 이상의 조건이 달린 건지,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게 대학에 가야 제대로 살 수 있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말에 녹아든 차별을 모른 척했던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학력·학벌 차별에 반대하는 투명가방끈 같은 단체의 글을 공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많은 청년정책이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해서 대학 비진학자 청년들이 소외되는 차별을 낳았는데요. 만약 대학 비진학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이 마련된다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대학 비진학자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윤서 | 현재 비진학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실효성을 따지기보다는 더 많은 시도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강연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비진학 청년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집 등을 비롯해서 청년들이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해도 지원해줄 수 있는 공간, 사회적 분위기 등... 그 중 특히 비진학 청년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사회 관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직장 혹은 학교가 아닌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비진학 청년의 커뮤니티 역할을 해주는 창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3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불평등'

|발제 3. 교육은 학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

운명과 능력을 거스르는 교육에 대하여

정용주 / 교사

(포럼 일자 : 2021 년 11 월 16 일 화요일)

저는 학생들이 집을 벗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능력주의, 입시 위주로 점철된 한국 교육의 현실

강연에 앞서 교육에 관한 연구 중 흥미로웠던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핀란드, 프랑스, 한국에서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엄마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일까?”를 질문했습니다.

핀란드, 프랑스 학생들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께 못한다고 해.,”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려.,” “선생님, 천천히 해주세요. 어려워요.”와 같은 얘기를 주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이 듣는 말은 “너 이거 못하면 애들한테 무시당해.,” “너 이거 못하면 선생님께 혼나.”와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집을 벗어나서 ‘못한다’고 말하는 의미는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선생님에게 혼난다는 의식을 내면화하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결코 가족의 연장선이자 괜찮은 연대의 공간이 아닌 거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언할 수 없는 차별과 특권이 정당화되는 사회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진정한 능력주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를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방해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존재합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출발점이 다른 비능력적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교육 문제만으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1년간 파견 근무했을 때 잊을 수 없는 2가지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첫 번째 광경은 수능 날 교육부 기자실에서 수능 시험을 브리핑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각 과목의 종료 시각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풀고, 올해 수능 난이도를 매기고, SKY 등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점수 합격선을 분석하는 거죠. 이때 보도하는 기자들 또한 대부분 ‘그’ 명문대 출신입니다. 이들에게는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역량을 쌓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았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광경은 교원 노조와 협의하는 모습입니다. 교사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저항했습니다. 시험을 통해 일종의 지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한다 해도 다른 경로로 들어왔으면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면화되어 있었던 거죠. 불평등 문제를 불공정 문제로 덮어버리는 이 광경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균등한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졌는가

1950~1960 년대에 영국은 보편적 교육과정 수립에 저항한 적이 있습니다. 1944 년 교육법 제정 이후, 그램어 스쿨에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이미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질 낮은 공동교육을 받게 되면 수준이 후퇴한다고 봤던 거죠. 이에 교육평등주의 학자들과 노동당 정치인들이 저항하면서 1965 년 이후에 그램어 스쿨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관계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종합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수립될 때 교육은 한 사회가 구성원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 마이클 영의 책 <능력주의>³⁸ 후반부에 나오는 첼시 선언에 따르면 ‘기회균등’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 게 아닙니다. 능력, 신분, 지능에 상관없이 삶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³⁸ 마이클 영, 유강은 옮김(2020), 「능력주의 - 2034년,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엘리트 계급의 세습 이야기」, 이매진.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민주공화국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저마다 좋은 삶을 누리며 존엄한 인간적 삶을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것과 노동시장에서 좋지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관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 연결성을 끊어내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었으나 한국에서는 그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한 나라의 불평등은 교육과 입시의 교집합이 차지하는 면적과 비례하는데요. 한국은 교육이 곧 입시이기 때문에 직업에 따른 학력별 임금(그림 33), 고용 형태에 따른 불평등(그림 34) 등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복잡성과 다층성은 오직 교육의 입시가 좌우하게 된 겁니다.

<그림 33> 직업에 따른 학력별 임금 수준



(출처: 고용노동부(2020),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그림 34>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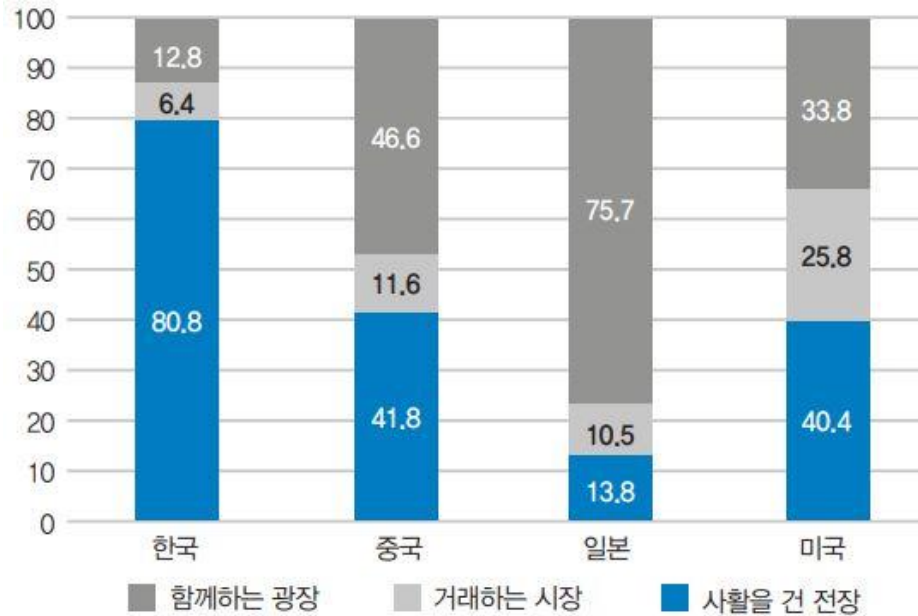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국 한국의 교육은 전쟁과 다름없으며, 학생이 쓸 수 있는 일종의 무기는 부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그림 35).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계속 발전하는데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되고 모든 학생이 일반고로 진학할 예정인데요. 본래 대학에 갈 생각이나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일반고 전환이 의미가 있을까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소외되는 또 다른 학력주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그림 35〉 자국의 고등학교 이미지에 대한 4개국 대학생의 인식



(출처: 김희삼(2017),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자료, 한국개발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

세대 간의 릴레이 경주를 끊어내는 두 가지 축

보편의 삶이 보편화되지 않은 공포가 끊임없이 입시와 교육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고 ‘양반 되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의 입시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고부담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시험 경쟁에 뛰어다니는 것이 기회의 평등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계층 이동과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경쟁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우리는 이렇게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고, 공정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은 민주적 불평등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담론은 ‘개방성’이라는 민주적 이상과 연결되면서 소수의 특권층을 양산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부모를 갖게 될지는 전적으로 운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어떤 미래를 갖게 될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³⁹ 이 또한 고소득층 부모와 저소득층 부모가 아이의 성장 발달에 개입하는 조기 교육부터 이미 육아 격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학생들은 개인의 힘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인생의 출발점을 물려받는 ‘세대 간의 릴레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노동, 복지의 통합적인 접근입니다. 교육 내에서만 혁신할 게 아니라 고졸 노동자의 노동과 복지의 질, 특성화고 학생의 교육이 좋아지면 교육 문제의 절반은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상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를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승자 독식의 원리에 의해 오직 최상위에 속한 사람들만 대부분의 보상을 받는 간극을 줄이자는 겁니다. 기준선을 정해서 낮은 학력이어도 일정량의 보상을 보장받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축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³⁹ 리처드 리브스, 김승진 옮김(2019), 「20 vs 80 사회」, 민음사.

I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정용주 선생님의 답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접 선택하게 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 환경 등 선부른 정책이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정용주 | 먼저 우리는 고교학점제를 넘어서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과 상관없이 행복한 고등학교 시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 개혁에서 학생에게 좋은 교육, 학생의 주체성을 키우는 교육을 이야기했지만, 학생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역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만 강조하는데 고교학점제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행복한 고등학교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교학점제 실시 이후 학생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면, 고교학점제는 복합적 건축물과 같습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통한 학생 선택의 폭 확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증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증가, 학교 공간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발, 선택과목 확대(학교 간·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역사회 학습장) 방안, 선택과목 다양화와 더불어 내실 있는 선택과목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과별 성취 기준 설정 및 조정 문제, 교사의 평가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 대한 문제, 미이수 예방 및 후속지원 방안, 학점제형 교육과정에 적합한 대입제도 마련, 교원 수급과 근무 여건 문제, 양질의 강사 확보 문제, 학생의 책무성 증가에 따른 미이수 예방 문제, 교육과정 및 시설 측면에서 학교·지역 간 격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강연에서 아시아권 지역에서 형성된 ‘시험 문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유독 아시아권에서 시험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용주 |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에서 발행한 2015년 보고서인데, 제목은 「아시아의 시험문화 (The Culture of Testing : Sociocultural Impacts on Learning in Asia and the Pacific)」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배움의 사회문화적 영향으로서 시험 문화를 분석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나라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과도한 경쟁 압력으로 내모는 평가 집착 현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국가를 지탱하고 재생산하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생들의 작고 섬세한 모든 것을 객관화하고 규격화해 학생들을 기록의 그물망에 가두게 되고, 고부담 평가에 노출시킵니다. 그 배경에는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출세라는 정당화 기제가 작동합니다. 능력주의가 신분 사회와 연결된 전근대적 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고부담 시험은 더 나은 학교와 고등 교육은 물론, 더 많은 삶의 기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 중심적인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다른 관련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거나 시험 방식을 개편하는 것은 한국 교육 시스템상 완전히 불가능한 일일까요?”

정용주 |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능의 시험 방식은 개편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수능이 오랫동안 시행되면서 더욱더 유형화된 공부에 길들여지는 것과 미국 등에서 표준화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경향이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수능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시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수능이 강화될 수는 있지만, 표준화시험이 고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교학점제와 연동되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도 수능체제의 개편을 강제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좋은 교육이 실시될수록 격차는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은 학생의 다면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암기보다는 활동과 수행 능력을 키우는 데 맞춰져 있는데, 이러한 다면적 능력의 발달을 위한 교육과 평가는 결국 격차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육제도가 되더라도 이전 교육제도보다 좋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진화 방향이 교육 격차를 더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제도적 개입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 개인의 자기계발을 통한 능력 향상 등 능력주의를 통해 이룩한 성과도 존재하는데요. 능력주의는 본래부터 불평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불평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능력주의의 순기능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정용주 | 우선 능력과 능력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능력(Merit)은 개인이 가진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해 보상해주는 사회 시스템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능력주의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능력주의>의 저자 마이클 영(Michael Young)은 책에서 능력주의의 출현(The Rise of the Meritocracy)을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지능지수와 시험 결과, 개인의 능력만을 토대로 운영되는 사회가 실현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주의가 세습주의에 반하는 매우 공정한 시스템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점차 오로지 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는 위계질서가 형성되고, 엘리트들이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억압하고 탄압하고 노골적으로 경멸하며, 점차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의 논리로 변해가는 현상을 그려냅니다.

마이클 영이 그려내는 능력주의는 능력주의가 가진 명과 암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개인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정치학의 오랜 주제였습니다. <정의론>의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저자 존 롤스는 ‘무엇이 개인의 능력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지능, 신체 능력 등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비능력적 요인이므로 개인의 능력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 추첨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마이클 샌델에게서도 일정 부분 계승되고 있습니다.

결국 능력주의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교육이 사회적으로 배태되고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한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육, 노동, 복지가 통합된 체제를 그리면서 능력과 보상의 고리를 사회적으로 완화시키는 제도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의 대다수 사람은 능력주의를 공정한 평가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능력적 요인보다 비능력적 요인이 좌우하는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차등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깨닫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정용주 |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제도를 통해 깨닫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공정성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격차와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의 200년 연구, 「한국 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에 따르면, IMF 이후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고착화, 양극화의 기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을 지역과 계층으로 분석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수능의 영향으로 부모의 문화 자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교육적 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능력주의의 요인이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국공립대학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교육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투자, 학교 교육에서 책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무성 강화를 통해, 교육에서 부모의 배경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실천을 한다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3차 포럼 : NPO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불평등'

|발제 4. 자본과 국가는 노동의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윤지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포럼 일자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아시나요? 제가 일하는 직장이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비영리 변호사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주로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인,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를 둘러싼 평등의 논리

2016년 5월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청년 노동자 '김군'⁴⁰이 승강장안전문(일명 스크린 도어)을 고치다 달려오는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참한 사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이 꾸러졌고, 저는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것은 2008년, 2011년에 진행된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및 안전업무의 외주화입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정확한 기준 없이 숙련/단순업무와 핵심/주변업무를 나누고, 단순 업무와 주변업무 노동자를 외주화했습니다. 경영·기획과 관련된 업무는 핵심업무로, 현장에서 기계 및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는 단순업무로 구분했던 거죠. 비용 절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2인 1조 작업은 불가능했고, 안전업무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단히 낮은 비용으로 위험한 업무를 하게 된 것이죠.

⁴⁰ 유족이 본명으로 부르기를 원하지 않아서 붙인 이름.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그런데 문제는 서울메트로에서 기존 직원은 그대로 대우하고,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최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에 100%를 지급했던 인건비가 외주로 바뀌면서 70%로 책정됐고, 다시 외주 하청업체가 일부를 수수료로 떼어가면서 노동자는 그 나머지를 받아 가게 된 것입니다. 업무 강도도 높고 위험한데 임금은 낮아서 새로 입사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자 서울메트로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거 고용해서 업무에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졸업 후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교여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습을 나가기도 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군은 그렇게 일을 시작했고 19살에 사망했습니다.

〈그림 36〉 2016년, 19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도중 사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현장



(출처: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393, © 권우성)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사실 ‘김군’이 맡았던 안전업무는 주변업무가 아니라 중요한 핵심업무였습니다. 당시에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 5호선~8호선까지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도시철도공사는 안전업무를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업무는 핵심업무가 아니라 주변업무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및 외주화의 대상이 되었는데 결국 그 기준 또한 불분명했던 거죠.

따라서 진상조사단은 ‘김군’과 같이 핵심업무를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고, 서울메트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공정’을 외치며 무기업무직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그림 37>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 모습입니다.

<그림 37>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 소속 회원들이

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 정규직 전환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출처: news.mt.co.kr/mtview.php?no=2017091313488246321, ©뉴스1코리아)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결국 이 문제는 감사원까지 거치게 되었고,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경우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의 평생급여 차액이 5,589 억 원이 발생한다는 비용 절감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실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법령을 위배했다는 공정 채용 절차의 논리를 가져옵니다. 이 기적의 논리대로라면 본래 그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을 해고하고 수행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을 거쳐서 다시 채용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일자리의 논리를 가져옵니다. 이 세 가지 논리가 모두 평등의 논리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노동 현장의 불평등

불공정이 아닌 불평등 문제는 제가 실제 경험했던 다양한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소송을 거쳐 싸웠고 결과적으로는 승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세월호 참사로 숨진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지시해서 특별히 인정된 거죠. 여전히 다른 기간제 교사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또한 내부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인해 애초에 정규직을 뽑지 않아서 기간제로 채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교사와 동일한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능력을 의심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능력주의의 논리, 공정 채용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방송작가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현재 MBC보도국에서 일했던 두 방송작가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방송작가는 MBC보도국에서 2011년부터 거의 10년간 생방송 아침 프로그램의 일부 꼭지를 담당했는데도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한국 방송작가는 TBS를 제하고 모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MBC는 방송작가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다른 방송작가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다는 일자리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또한 부당한 노동 환경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곁에서 생활 전반을 돕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겨우 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과 재정 부담도 높아진다는 비용의 논리로 적은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용의 논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여성, 여성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5~60대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인 돌봄노동의 업무 강도와 수행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게 평등하다고 여기는 거죠.

이주노동자 역시 비용의 논리의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은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은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논리가 환영받는 등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고용주들은 값싼 노동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고용률이 높아질 겁니다. 내국인들의 일자리는 불안해질 것이고, 임금 수준은 하향 평준화됩니다. 아무리 최저 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해도,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최저선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틀린 평등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

도대체 평등은 무엇일까요? 노동에서의 평등에 관한 법규를 찾아보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해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명시된 차별적 처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사원이 능력에 따른 선별 절차를 강조했던 이유도 법 때문이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사의 직원은 시험 성적, 근무 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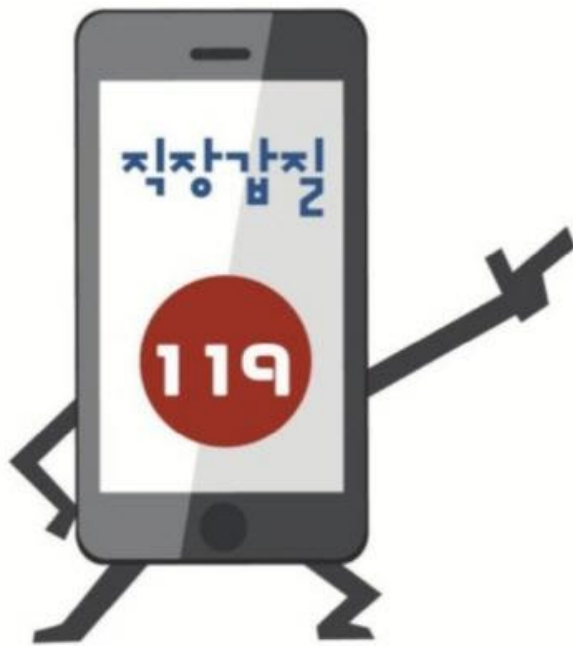
기 때문이죠.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적으로 임용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은 임용 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꼭 평등에 관한 판결이나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판결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 경영 주체의 경영권과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어떤 면에서 서로 충돌하는데요. 2003년 7월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기업이 잘 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가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된다’는 기업 중심의 논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감사원, 대법원 등 헌법기관이 평등을 왜곡하고, 노동자 중심이 아닌 국가와 기업 중심으로 평등의 논리가 차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노동의 불평등에 맞서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실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평등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2017년, 직장에서의 갑질을 없애자는 취지로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만들어졌는데요. 오픈 카카오톡방의 익명을 활용해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직장 갑질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갑질119는 직장 갑질에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식시키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언론에 알리고, 법에 담는 작업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노동 문제를 딱딱하지 않게 친근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활동이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림 38〉 직장갑질119 오픈카톡방 - 성심병원 장기자랑에 관한 제보 화면



(출처: withgonggam.tistory.com/2070)

두 번째로 현장에서의 노동의 가치, 평등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법 자체가 모순적인 상황에서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평등의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학습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왜 바로 서야 하고, 왜 필요한지 시민들이 인식한다면 사회는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 현장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 : 윤지영 변호사님의 답변

“강연에서 노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직장갑질119의 성과 중 하나가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한림대의료원지부’ 설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를 통해 탄생한 첫 번째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윤지영 | 한림대 성심병원에 근무하던 다수의 직원들이 직장갑질119에 익명으로 들어와서 갑질을 이야기했고, 서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이후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알지 못해서’이기도 한데요. 윤지영 변호사님이 실제로 활동하면서 겪은 사례 중 기본적인 노동인권교육이 부재해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지영 |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도요. 근로계약서를 통해 내가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는지 확인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남길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근로기간, 임금, 근무시간 등의 문제가 터졌을 때 서로 간에 어떻게 합의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다투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특히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름이 될 때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증거자료가 없으면 실제로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요.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나타난 노동 문제가 있을까요? 최근 제보된 사례 중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노동 문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윤지영 | ‘감염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사생활에 개입하는 사례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등장했어요. 주말을 보내는 동안 어디에 갔는지 보고를 해야 하고, 노래방, 술집, 당구장 금지 등의 원칙을 회사가 내걸죠. 이걸 어기면 징계를 받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강제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하거나 해고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외에는 민간 영역에의 대책은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공공부문 역시 비정규직 수는 줄였지만 처우 개선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정규직화’뿐일까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윤지영 | 일단은 노동자의 개념을 넓히고, 노동자성 다툼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 법’⁴¹처럼 말입니다. 실제로는 노동자인데 프리랜서인 것처럼 취급되어 처음부터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비정규직을 남용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직화가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는 않는 않지만,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이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상용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⁴¹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함.

[NPO 정보지식포럼 3차]

불평등,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

“‘차등 대우가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이 결국 서울교통공사의 ‘노노 갈등’과 같은 사례를 낳았는데요. 노동자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연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윤지영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에게도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질수록 정규직 고용이 오히려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결국 정규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니까요.